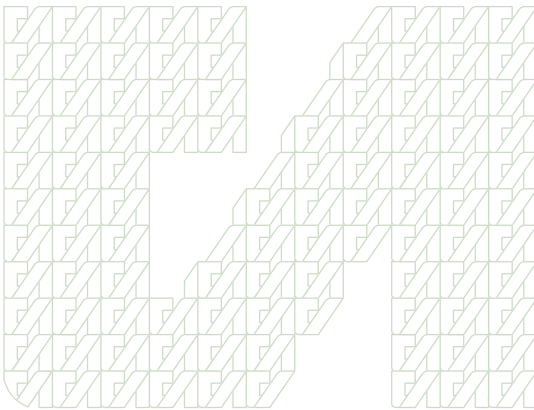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염인섭



기본연구 2022-22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염인섭

연구책임

• 염인섭 / 미래기획실 책임연구위원

기본연구 2022-22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발행인 박 노 동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 디자인 U TEL. 042-526-9993 FAX. 042-625-6882

ISBN : 979-11-6075-352-3 9335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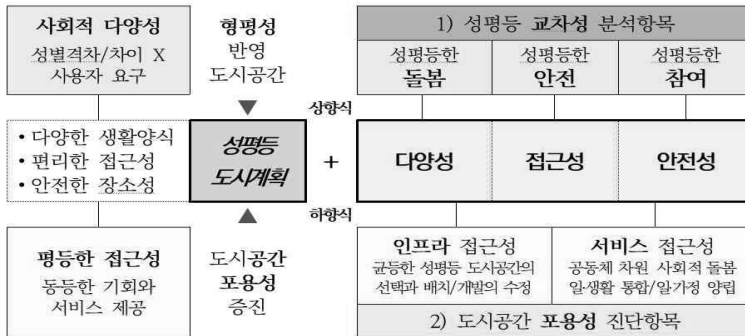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대전시는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성 기반 도시계획이 전무한 실정임
- 대전시 젠더관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성평등과 공간포용성을 결합한 형태의 ‘성평등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 연구결과 : 성평등 도시계획의 기본구조 정립

1. 포용도시 관점의 『성평등 도시계획』 개념 정립



2. 교차성(성평등)과 포용성(평등한 접근성)의 연계구조 확립

공간 유형		성평등 가치실현	성평등 교차성 분석항목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한 돌봄	성평등한 안전	성평등한 참여	
생태 공간	공원		▼	▼	▼	소통참여 서비스 (교류 공간)
	녹지					
이동 편의	가로		다양한 생활양식 / 사람중심 서비스 디자인			균등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 (창업지원 공간)
	도로					
공공 시설	학교					보장안전 서비스 (여가문화 공간)
	공공청사		편리한 접근성 / 모든 사람(약자) 배려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안전한 장소성 / 공동체 기반 생활권 환경			돌봄양육 서비스 (돌봄양육 공간)
	청소년수련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 공간)	
도시계획시설 △			▲	▲	▲	공간 포용성 정책
형평성 관점 반영			도시공간 포용성 진단항목			

3. 성평등 도시계획의 지표체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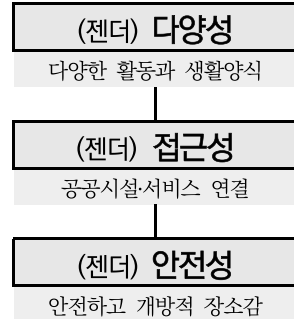
① 도시미래상 설정 : 성평등 핵심 이슈 반영

- 교차성 분석(성별 영향력과 공간수요) : 공간유형별 현황분석 기준
- 포용성 진단(인프라/서비스 접근성 실태) : 공간포용성 실태분석 기준



②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지표

- (젠더) 다양성 계획지표
 - 모든 시민의 일상적 활동과 생활양식 반영
- (젠더) 접근성 계획지표
 - 사용자 관점의 공공시설·서비스의 연결
- (젠더) 안전성 계획지표
 -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개방적 장소



③ 자치구별 생활권 계획 부문별 서비스 중심 공간계획 지표

; 생활권 단위 공동체 차원에서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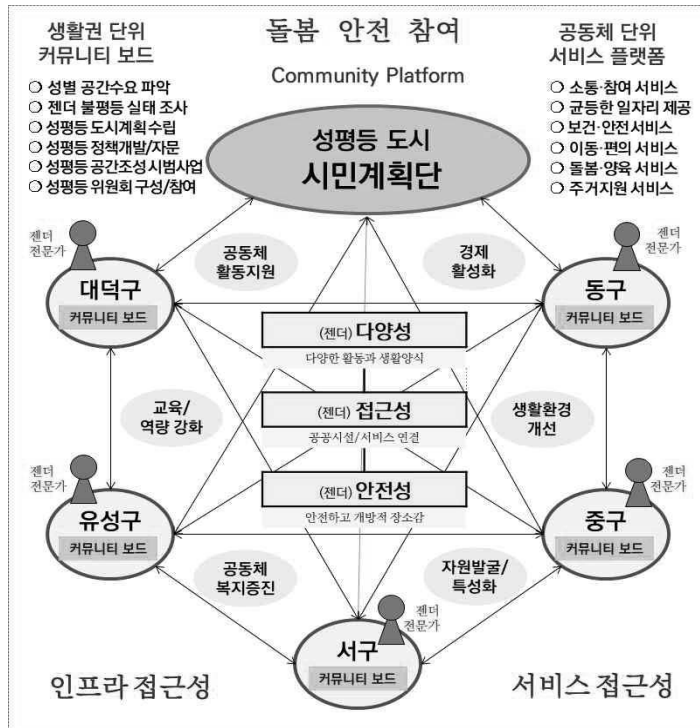
- 소통참여 서비스 ▷ 형평성 기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류 공간
- 균등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 ▷ 성별차이와 격차가 없는 창업 공간
- 보건·안전 서비스 ▷ 성폭력/젠더폭력 예방 및 여성건강 증진 여가문화 공간
- 이동편의 서비스 ▷ 성별 이동패턴과 이동약자를 배려한 가로/도로
- 돌봄양육 서비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양육(친화) 공간
- 주거지원 서비스 ▷ 한부모,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④ 양성평등 정책지표(가중치)

- [참여] 성평등 사회참여 및 거버넌스 포용성
 - 경제적 활동, 의사결정, 전담인력, 성평등예산, 대표성 등
- [안전] 성평등 기반 공동체 역량강화와 안전 증진
 - 시민참여단, 지역사회 안전모니터링, 안심구역 조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 [돌봄] 성평등 문화 기반 돌봄환경 조성
 - 공동체 돌봄인프라 확충, 여가시간 활용, 정보화 격차 등

4. 성평등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구성_자치구별 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보드

- ① 성평등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구성 : 성평등 거버넌스 포용성 강화
- ② 젠더전문가 참여 커뮤니티 보드 구성 : 자치구별 성평등 공간수요 반영
- ③ 성평등 도시 데이터플랫폼 구축 : 이슈별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체계



■ 정책건의

1.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 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성평등 관련 사항 포함
 - 성평등 핵심이슈를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 자치구별 젠더전문가 및 시민참여 중심의 커뮤니티 보드 구성 관련 법적근거 마련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단을 구성) 참여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필요한 경우에는 젠더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을 받을 수 있다.

- ② 가칭)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 구성 지원
 - 시민계획단 운영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조직, 자치구별 커뮤니티 보드 구성

2. 생활권 단위 성평등 도시공간 확산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마련

- ① 행정동 단위 마을계획단(커뮤니티 보드) 구성 : 자치분권 네트워크형 관리
 - 생활권 단위 마을계획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② 성평등 공간계획 관련 마을단위 리빙랩 운영
 - 성별차이와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인식과 수요관리
 - 마을단위 거주민의 일상생활 연계 돌봄양육 공간 확충과 평등한 접근성 강화
- ③ 시민주도형 성평등 공간구성과 도시계획 참여기반 마련
 - 마을단위 젠더불평등 공간구성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현장워크숍 체제
 - 마을단위 성평등 도시공간과 공공시설 맵핑(mapping) : 돌봄인프라, 공공복지 시설(아동/청소년/노인), 여성친화시설, 청년공간, 평생학습시설, 가로공간 등 성평등 공간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체제

제목 차례

1장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7
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내용	9
2장 선행연구 고찰	13
1절. 양성평등 관련 정책 고찰	13
1. 여성친화도시와 성별영향평가 제도	13
1) 여성친화도시 정책	13
2) 성별영향평가 정책	21
2. 양성평등 정책 연계 공간계획	30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년~현재)	30
2) 국가성평등지수	34
3) 지역성평등지수	36
4) 공간포용성 지표	37
2절. 성평등 도시계획 사례 고찰	41

1. 관련 사례연구 고찰	41
1) 캐나다 벤쿠버 성평등 정책	41
2)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페미니스트 관점의 도시계획	43
3) 여성친화도시 유엔공동계획(UNJP)	46
2. 성평등 도시공간 개념과 적용 사례	49
1) 성평등 도시공간 개념과 구성방법	49
2) 성평등 핵심이슈 도시기본계획 적용 사례, 『2030 서울플랜(2014)』	52
3)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서의 성주류화 개념	55
3장 분석의 틀	63
1절. 성평등 도시계획 개념과 기본구조	63
2절. 교차성과 공간포용성 연계구조	66
3절. 성평등 도시계획 지표체계	67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간포용성 지표재구성	67
2. 성평등 도시실현을 위한 계획지표	69
3. 양성평등 정책 중심의 성과지표(가중치)	70
4장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75
1절.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정립	75
1. 기본구조	75
1) 계획지표 구성	77
2) 성과지표 구성	79
3) 가중치 설정 : 양성평등 정책과 포용도시 정책의 계층구조 정립	81

2. 단계별 계획수립 내용	83
1) 도시미래상 설정	83
2) 교차성 분석 [성평등 현황분석]	84
3) 포용성 진단 [성평등 실태분석]	88
2절.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 운영	91
1. 생활권 차원 성평등 커뮤니티 보드 구성	91
1) 기본개념 : 성평등 커뮤니티 보드_ ‘(가칭)성평등도시 시민계획단’	91
2) 기본구조 :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보드 구성과 주요 기능	93
2. 주민체감형 성평등 도시 인프라서비스 강화	98
1) 생활권 공간위계를 고려한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98
2) 생활권 기반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101
참고문헌	105

표 차례

[표 1-1] 국내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6
[표 2-1] 국내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지정 현황	14
[표 2-2] 여성친화도시 제도적 특성 변화(기준:2022년)	16
[표 2-3] 여성친화도시 5대 성과목표와 주요 지표	17
[표 2-4] 여성친화도시 필수지표 항목	18
[표 2-5] 여성친화도시 선택지표 항목(5개)	19
[표 2-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및 분야별 가중치	35

[표 2-7]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36
[표 2-8] 대전시 공간포용성 본 지표 도출(안) - 복합지표 적용	38
[표 2-9]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51
[표 2-10] 비엔나시의 성인지 도시계획의 목표 및 내용	56
[표 3-1] 포용도시 관점의 성평등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구조	64
[표 3-2]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의 연계 구조	66
[표 3-3] 대전시 공간포용성 지표- 유형별 복합지표	68
[표 3-4] 분석의 틀 :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71
[표 4-1]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도입을 위한 기본구조	76
[표 4-2]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 연계 구조	83
[표 4-3]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92

그림 차례

[그림 1-1] 젠더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슈	4
[그림 2-1]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와 단계별 진입 여건	15
[그림 2-2] 성별영향평가 대상(예시)	22
[그림 2-3]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23
[그림 2-4]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 여성가족부	25
[그림 2-5]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	26
[그림 2-6]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체계	28
[그림 2-7]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차(2015년)와 2차(2018년) 내용 비교	31
[그림 2-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상 정책과제	33
[그림 2-9] 국가성평등지수(GGI) 현황	34
[그림 2-10] 공간포용성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분석내용	39

[그림 2-11] 생활권 차원 공간포용성 지표체계 구조	40
[그림 2-12] 벤쿠버의 형평성 관점의 도시계획적 접근방법	41
[그림 2-13] 바르셀로나 페미니스트 도시계획의 기본원칙(돌봄, 안전, 참여)	45
[그림 2-14] 유엔공동계획의 여성친화도시 개념	48
[그림 2-15] 2030 서울플랜의 기본구조	52
[그림 2-16] 2030 서울플랜 핵심이슈 선정 과정	53
[그림 2-17] 서울시 성평등 도시공간구조(안)	54
[그림 2-18] Frauen-werk-stadt 사업의 주거단지	58
[그림 2-19] 마리아힐프지구 조성사례	60
[그림 3-1] 거주민의 역량강화와 참여에 의한 공간의 생산 과정	65
[그림 3-2] 포용도시 담론의 발전과정과 한계	65
[그림 4-1]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체계(안)	75
[그림 4-2] 사람중심 가로공간 가이드라인의 공간단위/영역단위 구분	78
[그림 4-3] 성평등 도시계획의 단계별 계층구조(안)	81
[그림 4-4] 지역사회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예시)	84
[그림 4-5] 시민참여형 사회혁신활동(리빙랩) 예시	85
[그림 4-6]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사례(예시)	85
[그림 4-7] 젠더관점을 반영한 성별 공간수요 분석(예시)	86
[그림 4-8] 요일별 이동패턴(예시)	87
[그림 4-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예시)	88
[그림 4-10] 생활권 단위 공간포용성 강화를 위한 지표체계	89
[그림 4-11] 대전시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커뮤니티 보드) 기본구조	93
[그림 4-12] 대전광역시 생활권 구상도(左:대생활권/右:중생활권)	98
[그림 4-13] 여성친화도시 유형별 생활권	99
[그림 4-14] 대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유형별 생활권역 구분	100
[그림 4-15] 성평등 도시관련 빅데이터 활용체계(예시)	103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공간 포용성 문제 : 공동체 차원 흐름의 공간과 관계적 공간의 중요성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교통약자, 신체적약자, 경제적약자 등이 도시공간 속에서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공간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도시’의 개념이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음¹⁾
- 이와 함께 카메론(Cameron, 2005)²⁾은 우리가 사는 모든 도시공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공간과 함께 흐름의 공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³⁾.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맥케인과 와드(McCann and Ward, 2010)⁴⁾도 지역정책은 관계적이며 동시에 영역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관계적 공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 자체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 결국, 포용적인 도시공간은 시민(공동체)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지하여 서로 다른 공간사용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도

1) 최병두(2017),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6호, 대한지리학회

2) Cameron, A.(2005),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initial repor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p.194-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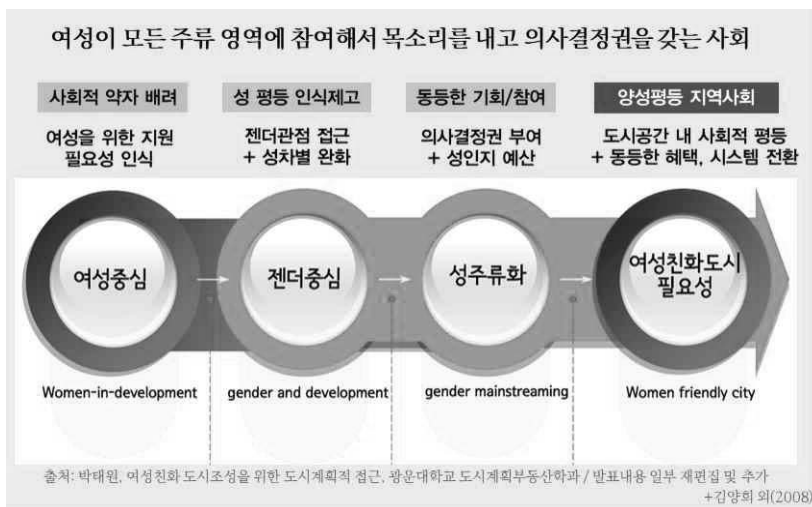
3)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재인용

4) McCann, E. and Ward, L.(2010), Relationality/territoriality: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cities in the world, Geoforum, 41, p.175-184

시 안에서의 다양한 사람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안정감을 추구하는 도시모형이라고 볼 수 있음⁵⁾

■ 젠더 관점의 사회적 불평등 이슈와 공간계획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

- 202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2년여간 지속되었던 펜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UN Women, 20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일자리 감소 및 경제위기,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젠더폭력 등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한 정책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OECD에서도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 성별 교차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음



[그림 1-1] 젠더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슈

자료: 박태원(?), 김양희 외(2008) 일부 재편집

5) 엄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재인용

■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성평등 이슈 반영이 미흡

- (법적근거) 2022년 10월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 중에서 도시계획조례 상 성별 차이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 관련 도시계획 수립지침이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도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유일한 상황임
 - 이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장은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지방자치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시민참여) 성평등 도시계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양식, 생애주기, 생활환경 욕구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임
 - 참고로 최근(2012년~2021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이 직접 계획과정에 참여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반면, 대전시는 최근에 수립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2019.10)』에서 성평등 또는 성별차이, 성별 격차 등에 관한 핵심이슈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지표, 현황분석, 시민의 식조사 항목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⁶⁾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은 전무한 실정이고, 공급자 중심의 계량 분석 위주의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렇듯, 도시계획 분야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과 장소 단위의 차별화된 디자인 기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6)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상 도시지표(p.55~56)는 도시경제지표와 도시환경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성평등 관련 지표와 관련된 도시환경지표에는 생활, 문화, 복지, 공원녹지, 교통, 정보통신, 환경, 경관, 재난안전 등이 있지만, 복지환경 부문에 '여성복지시설' 지표 외에는 전무한 실정임

■ 공간계획 차원의 성평등 지표체계 도입을 검토

- 우리나라의 성평등 도시실현을 위한 정책들은 도시공간 속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거나 하위 차원의 공공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음
- 성평등 정책을 실제 도시의 공간환경 속에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부터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운영(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2022년 1월 기준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 총 95개가 지정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3년부터 서구(2013년 지정~)를 시작으로 대덕구(2015~), 유성구(2016~), 중구(2020~), 동구(2016~2020) 등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단, 대전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가족친화기업 등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그룹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기초지자체 단위로 연도별 세부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별도의 공간계획 차원의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표 1-1] 국내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자료: 여성가족부(기준: 2022년1월)

지역	계	지정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	43	47	5
서울	14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
부산	6	-	북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
대구	2	달성군	수성구	-
인천	5	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
광주	3	-	광산구	동구, 북구
대전	5	중구	동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	-
울산	-	-	-	-
세종	1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	11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
강원	8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	-
충북	6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
충남	11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아산시
전북	3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	-
전남	8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
경북	6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
경남	6	남해군, 고성군,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제주	-	-	-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공간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는 성평등 도시계획을 위한 지표개발과 평가항목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상위차원의 분야별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성평등한 공간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기본전제 : 사회적 성평등 + 공간 포용성 =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체계

- 본 연구는 대전시의 도시계획체계 상 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을 분야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함
- 본 연구는 성 평등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목표로 현행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실제 도시공간 속에서 적용 가능한 성평등한 도시계획 기법의 기준점(지표체계)을 제시하기 위함
-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성평등(젠더관점) 개념과 공간포용성 개념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젠더기반 즉, 사회적 성평등과 형평성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대전시 젠더관점의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성평등과 공간포용성이 결합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의 도입방법과 그에 따른 계획체계를 정리하기 위함임
- 이러한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들을 설정함
 - 첫째, 성평등 도시계획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 둘째,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성평등한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 셋째, 성평등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의 지표(안)을 구성하여 성평등한 도시계획기법 도입·적용에 기여하고자 함

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법정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생활권계획 등
 - 계획수립 단계에서 성평등 이슈를 반영하거나 양성평등 및 형평성 관점의 계획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함
 - 조사분석 : 현황분석 및 여건변화 실태조사 등
 - 기본구상 : 핵심이슈별 계획, 도시미래상 설정 등
 - 부문별계획 : 토지이용, 교통물류, 정보통신,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경제·산업,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방재·안전, 재정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명시된 도시계획 내용)
- **도시기본계획 내용**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내용** : 도시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

- 지구단위계획 내용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내용

■ 공간적 범위 : 대전시 행정구역

- 대전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생활권 차원에서 거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지리적/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 영역적 공간의 개념을 도입함
- 이는 형평성 관점에서 사회적 성평등과 공간적 포용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함

2. 연구의 내용

■ 선행연구 고찰 _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지수, 성평등 도시계획 관련 지표, 젠더관점 등
- 포용도시, 공간포용성 지표, 성평등 도시공간 구성방법 등

■ 성평등 도시계획 사례 고찰 _ 사례조사

- 국내·외 성평등 관련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 주거지원 등에 관한 정책 고찰
-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 차원의 접근방법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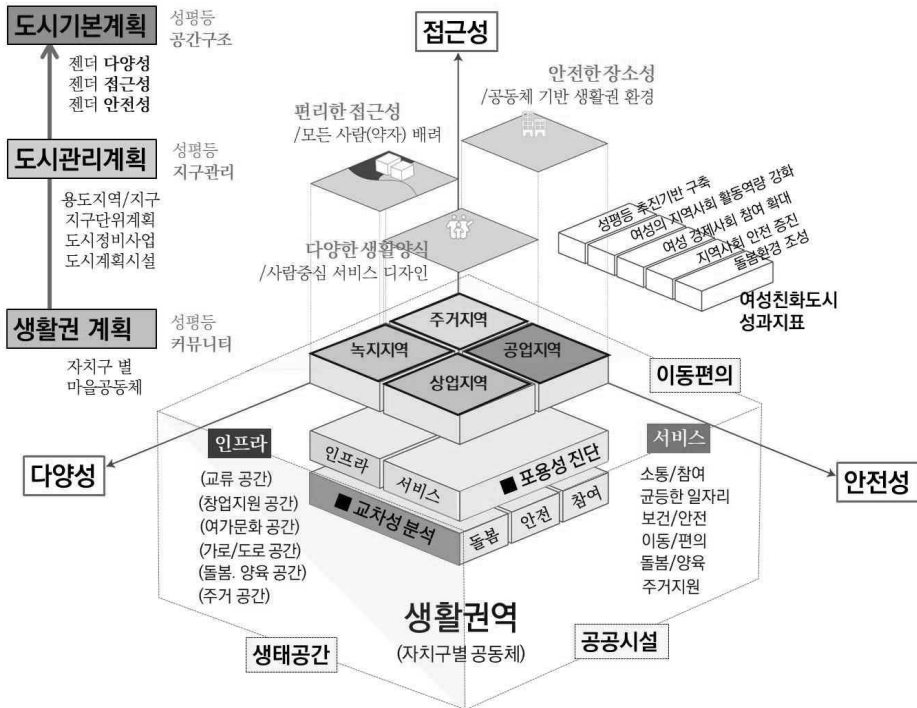
■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모색

- 성평등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구조 정립
- 성평등 도시계획 차원의 교차성과 포용성의 연계구조 정립

- 성평등 도시실현을 위한 단계별 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제시
 - 도시미래상 설정 (성평등 도시계획 핵심이슈 반영 방법)
 - 성평등 도시계획의 계획지표와 성과지표
 -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 구성 방안

■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정립

- 성평등 도시의 미래상 정립 : 다양성, 접근성, 안전성 차원의 비전·목표
- 도입규모(계획유형) 고려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생활권계획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의 계획지표와 성과지표 및 가중치 설정
- 성평등 가치(돌봄, 안전, 참여) 실현을 위한 공간포용성(공공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강화방안 모색



[대전시 성평등 도시계획체계(안)의 작동구조]

선행연구 고찰

1절 양성평등 관련 정책 고찰

2절 성평등 도시계획 사례 고찰

2장

2장 선행연구 고찰

1절. 양성평등 관련 정책 고찰

1. 여성친화도시와 성별영향평가 제도

여성친화도시(2009년~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되는 제도로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일하는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초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오고 있다. 성별영향평가(2002년~현재)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1) 여성친화도시 정책

□ 개요

- 정의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동시행령 제24조)
- 대상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기초지자체)
- 지정기간 : 5년(5년마다 재지정 심사)⁸⁾ *2022년 현재, 총 95개 지정
 - (1단계) 1~5년 차 신규 지정도시
 - (2단계) 5~10년 차 재 지정도시
 - (3단계) 10~15년 차 재 지정도시

7) 성 평등한 의식 속에서 모든 세대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정책

8)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 ('09) 2개 → ('11) 30개 → ('13) 50개 → ('15) 66개 → ('17) 86개 → ('18) 87개 → ('19) 92개 → ('20) 96개 → ('21) 95개

○ 지정방법 : 신규지정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5가지)에 따른 사업계획 심사, 재지정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 심사

- 5대 목표 : ①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표 2-1] 국내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지정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기준:2022년1월)

구분	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	43	47	5
서울	14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
부산	6	-	북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
대구	2	달성군	수성구	-
인천	5	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
광주	3	-	광산구	동구, 북구
대전	5	중구	동구, 유성구, 서구, 대덕구	-
울산	-	-	-	-
세종	1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	11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
강원	8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횡성군, 영월군, 원주시	-
충북	6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
충남	11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아산시
전북	3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	-
전남	8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
경북	6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
경남	6	남해군, 고성군,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제주	-	-	-	-

□ 제도적 특성⁹⁾

- 비전·목표 체계 :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으로서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비전을 설정하고, 형평성과 참여, 돌봄,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젠더평등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며, 여성친화도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하여 성평등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비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	
목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추진과제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조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 강화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물물에 대한 지역 사회 책임 강화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모든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그림 2-1]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와 단계별 진입 여건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2021)

9) 여성가족부(2021.11),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

- 주요 특성 : 초기(2022년 이전)에는 3단계로 구분된 단계별 승급제도로 운영하였으나 협약에 의한 갱신하는 구조로 변경되었고,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포상기준, 광역지원 기반, 민관협력 체계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유도책과 실효성 및 형평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표 2-2] 여성친화도시 제도적 특성 변화(기준:2022년)

구분	현행 (2022년 이전)	개선 (2022년 이후)
지정 방식	▶ 진입(1단계) → 발전(2단계) → 선도(3단계) 등 단계별 승급	▶ 협약갱신 제도
심사 기준	▶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표	▶ 공통 심사지표 활용
이행 점검	▶ 3년 차 중간 평가 ▶ 지자체별 계획 이행 여부 점검	▶ 매년 이행점검 실시 ▶ 정량 점수 산출 ▶ 평가결과를 지정 심사에 반영
지정 철회 기준	▶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여성친화도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철회 가능	▶ 기준 명확화 1. 지정심사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성평등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포상	▶ 지자체 '자가 추진' 후 광역 추천	▶ 이행점검 결과를 연계한 인센티브(incentive) 성 포상제 운영 ▶ 우수 여성친화도시 보고대회(신설) 개최 시 포상
민간 포상	▶ 장관 표창 대상자 전원 공무원	▶ 장관 표창의 30%(3점) 민간인 배분
광역 지원 기반	▶ 없음	▶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 협의체(가칭) 구성·운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자체 공모사업 실시 - 지자체를 '여성친화 조성 파트너(가칭)'로 지정
민·관 협력	▶ 도시별 시민참여단 운영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협의회 구성·운영

□ 성과지표 체계

- (초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5대 목표별로 다음 표와 같이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음

[표 2-3] 여성친화도시 5대 성과목표와 주요 지표

자료: 최유진(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표	지표	성과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인력	전담인력 1명 이상 (여성친화도시 추진기구 운영, 시민공모사업, 시민참여형 GIA사업)
	BSC 부서공통지표에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사업	여친지표에 성평등 사업 질 평가 포함, 성별지표에 정책 개선을 포함
	여성정책부서 주도하는 사업추진 TF	1개 이상
	성 평등 예산(성평등교육, 시민참여단, 협의체 운영, 시민공모사업, 특화사업)	전체 예산의 0.05% 이상 *성평등 시행계획 목록 여성가족부 협의
여성의 경제적 평등실현	(공공기관) 취·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여성 비율	50% 이상
	(공공기관 등록) 사회적경제마을기업 여성 CEO비율	40% 이상
	여성친화기업 인증(과 관리)	해당 지자체 5인 이상 기업체의 1%
	특화 사례	성별 직종 분리 개선 목표 사업, 여성고용률 관리 목표 사업, 공공일자리 성별 균형 배분 목표 사업
지역사회 안전 증진	마을안전지도비치 주민자치센터 비율	전체 읍면동의 50% 이상
	안전마을(안전길) 추진 읍면동 비율	년차별 1개 이상
	건축 또는 인프라 관련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도화	자참수준 이상의 제도화
	특화 사례	폭력 예방 시민 활동 사업, 시민참여단 안전활동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가족친화(일가족 양립) 기업 인증	해당 지자체 5인 이상 기업체의 1%
	돌봄 커뮤니티 구성	전체 읍면동의 30% 이상
	서로 돌봄 공간 운영	전체 읍면동의 30% 이상
	특화 사례	초등 돌봄 사업, 4-7시 시간제 돌봄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비율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또는 여성이장 비율	40%, 40%, 20%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해당 지자체 소속 시·도별, 연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시민 참여단 정책 의사결정과정 참여	3명 × 여성친화도시 년차
	특화 사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시민참여형 성주류화 사업

[2022년 이후 지표구성의 변화]

- 정량지표(150점)와 정성지표(350점)의 합(5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지표별 최소기준 충족 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실적자료로 평가하고 있음
 - 신규협약과 재협약의 기준점수를 차별화하고, 도시권(시·구)과 농어촌권(군)으로 지표별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성지표 내 지자체 자체설정 지표 포함
 - 재협약 시,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관련 **특화 사업 1개 이상** 필수

구분	신규 협약	재협약
시·구	300점	400점
군	250점	300점
적용 기준	정량지표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100점 ※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목표의 합이 50점 이상 - (군) 80점 ※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목표의 합이 4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130점 - (군) 100점 ※ (공통)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목표의 합이 50점 이상
	정성지표 (3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5대 목표별로 1개 이상 지표 평가 - (군) 5대 목표별로 1개 이상 지표 평가 * (공통) 지자체 자체설정 지표 1개 이상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 5대 목표별로 1개 이상 지표 평가 - (군) 5대 목표별로 1개 이상 지표 평가

○ 정량지표 (필수지표 150점 만점)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임

[표 2-4] 여성친화도시 필수지표 항목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60)	전담인력 1명 이상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업무 전담)	40
	5급이상 공무원 비율 광역평균 이상 (*군지역은 6급이상) 여부	10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 (5대 목표 관련 필수 지표 10여개 제시)	10

2. 주요 목표별 사업 (90)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20
	지역사회 안전 증진	안전 부서 TF 구성 및 운영	20
	돌봄환경 조성	돌봄노동자(돌봄활동가) 지원 사업	20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비율 광역평균 이상	10
시민참여단 구성과 지속 운영		20	

○ 정성지표 : 선택지표(350점)

-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대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에 해당함

[표 2-5] 여성친화도시 선택지표 항목(5개)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3. 주요 목표별 실행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70)	부서평가 공통지표 운영	20
		여성 대표성 성과목표 관리와 여성 네트워크 운영	20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0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70)	여성친화기업 협약/인증 사업	20
		지역 산업 연계,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여성 취업 또는 창업 지원 사업	20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0
	지역사회 안전 증진 (70)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	20
		안심구역 조성과 여성 안전 네트워크 운영	20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0
	돌봄환경 조성 (70)	여성가족친화 마을 사업	20
		공공기관(장소) 또는 커뮤니티 시설 기반 일시 돌봄 운영	20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0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70)	시민참여단 행정/마을 의사결정 과정 참여	20
		여성활동 거점공간 조성(인력 지원)	20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0	

□ 시사점 1. (여성친화도시의 지표체계 개선방향)

- ①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도시재생 분야와 연계성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공간포용성 관련 지표를 보완
 - 도시설계 차원의 접근 : 안심구역 조성
 - 안전한 공간조성(가로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공원녹지 등)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여성가족친화 마을 사업, 커뮤니티 시설 사업, 여성활동 거점공간 조성 등
 -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 ②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설정에 있어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관련 성인지 관점에서의 삶의 질 지표를 보완
 - 지역적 형평성¹⁰⁾ 관점에서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에 관한 지표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

-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공간 속 다양한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체감·인지하는 공간 속성(4)¹¹⁾ - 매력

[공간적 포용성 평가항목]

- 장소성 = 정체성 + 소속감,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공간』
 - 개인에게 의미있고 매력적인 공간, 지역차원의 애착심을 주는 공간
- 접근성 = 유용성 + 편의성, 『편리하게 연결되는 공간』
 - 이동이 편리한 공간, 보행 네트워크 (시간)거리 양호한 환경
- 쾌적성 = 다양성 + 개방감, 『활력있고 열려있는 공간』
 - 자연과 공생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공간, 공간적 개방성 정도
- 안전성 = 안정성 + 편안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
 -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공간,

적이고 흥미로운 공간(장소성), 편리하게 연결되는 공간(접근성), 활력 있고 열려있는 공간(쾌적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안전성) - 을 고려해야 함

10)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p.40; 약자와 관련된 범·제도적 여건 상 신체적 약자(장애인, 임신부, 노인 영유아 등), 경제적 약자(저소득층, 실업자 등), 기능적 약자(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외국인, 여성, 어린이 등) 등에 관해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관련 제도적 지원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음. 다만, 지역적 약자의 경우, 시가화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약한 곳도 많은 편임. 공간포용성 차원에서는 지역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영향권역에 대한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1) 염인섭(2020) p.46. 재인용

2) 성별영향평가 정책

□ 개요

- 정의 :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포함)

①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평가 실시
- * 실과에서 평가 의뢰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검토(전문가 컨설팅)후 결과 통보

②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법령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실과에서 평가 의뢰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검토(전문가 컨설팅)후 결과 통보

③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인지예산에 반영, 연계 강화)

④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정부홍보사업 내용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추진

○ 대상(정책) :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2021. 7. 30 전부개정)
 -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제도 및 여건 조성 규정 마련
 - 실태조사 시 성별통계 구축 규정 마련
- 대전광역시 회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2021. 12. 29 개정)
 - 일선부 추차로를 장면초상 신설
-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29 개정)
 - 성별 등 특성반영이 반영된 실태조사 실시 포함 마련

사업

<p>외국인 성폭력, 성매매적 성담 진본환</p> <p>권선당 전</p> <p>외국인주민의 경우 언어등의 제약에 의해 성희롱과 같은 성별피의 경우 상담의 원활함이 부족했음.</p>	<p>권선당 후</p> <p>성별영향평가 권선당 결과를 통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센터 운영지점에 외국인 주민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1366 등 전문기관 연계 명문화되었음.</p>
--	--

- 대전시 인재개발원 일선부 유계실 신규마련
- 대전 시립미술관 홍보물 내부 심의기구 마련
 - SNS홍보물, 전시홍보물, 교육홍보물, 기타 총 4개 분야 심의
 - 운영사진: 미술관 홍보물 디자인, 문구 등의 성인지성 점검

계획

- 성별/연령별/권역별 분리 통계 반영
- 젠더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사회경제 분야 성별에 따른 차이점 반영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역 주변 정밀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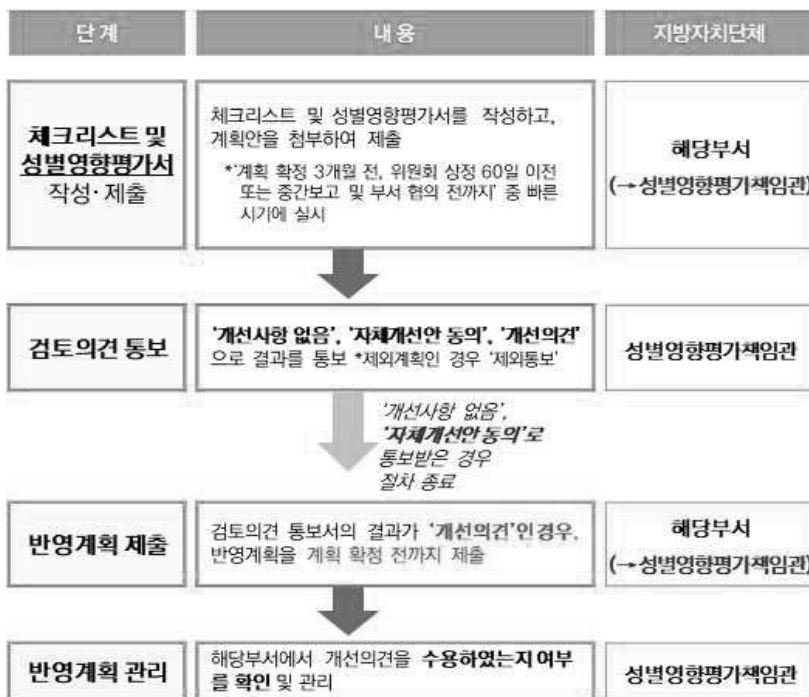
- ☑ 도시철도 2호선 성인지적 설계이 기준대로로 확충예정

[그림 2-2] 성별영향평가 대상(예시) 자료: 대전광역시

□ 주요 추진경과 (2002~2018)

-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도부터는 법령, 계획, 사업 등 대상정책이나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음
- 모든 성별영향평가 절차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평가서 제출 및 반영 결과처리 등이 진행됨¹²⁾

- 2002.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2005.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20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2011~20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 사업 →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및 시행 (2014~)
 - * (2014)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에 '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
 - * (2015)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 (2016~2017) 지방시·자치구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범위 명확화
 - * (2017)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 개선권고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개선계획, 조치기한 경과 30일 이내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그림 2-3]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자료: 여성가족부(2022), 성별영향평가지침

12)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lawmaking.go.kr>)를 통해 진행

□ 특정성별영향평가

- 정의 :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특정영향평가를 실시
 - 대상 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 2 및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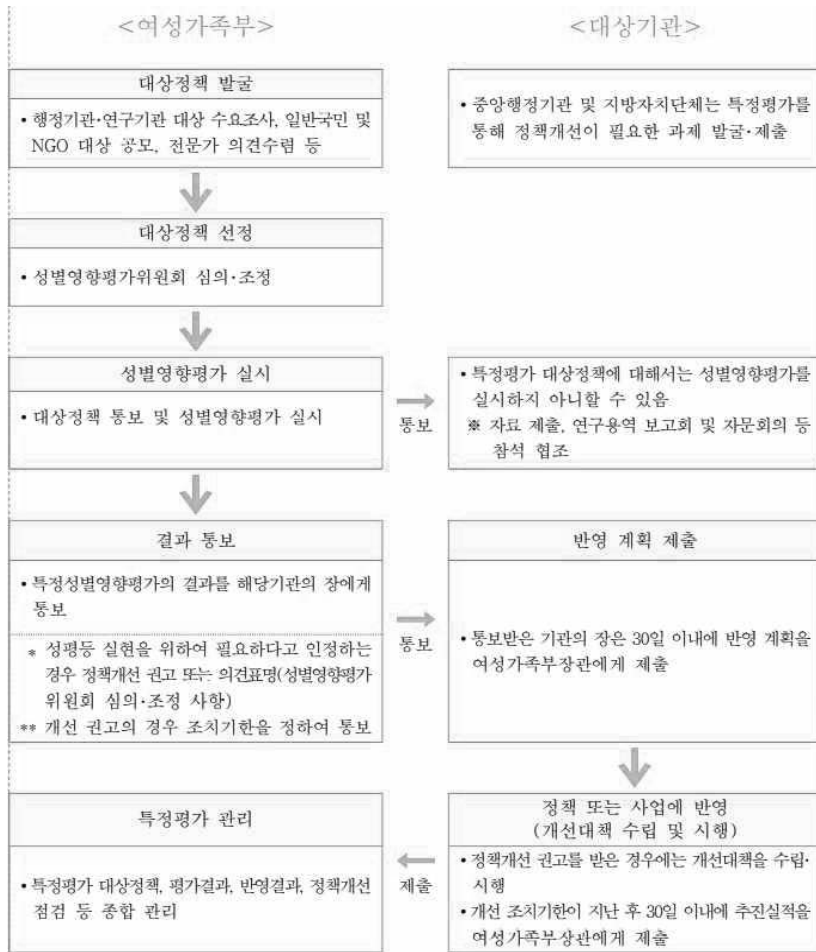
○ 대상정책과 평가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 특정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정책개선 권고

- 시행 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장] ▷ 특정평가의 결과를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앙정부 소관 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책개선 건의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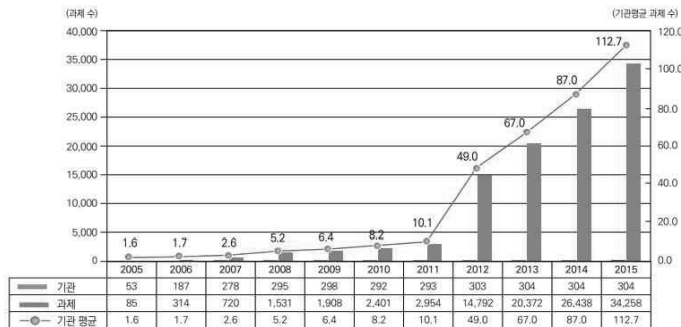
- 시행 중인 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 국비 또는 시·도비 위임사업(매칭 사업) 포함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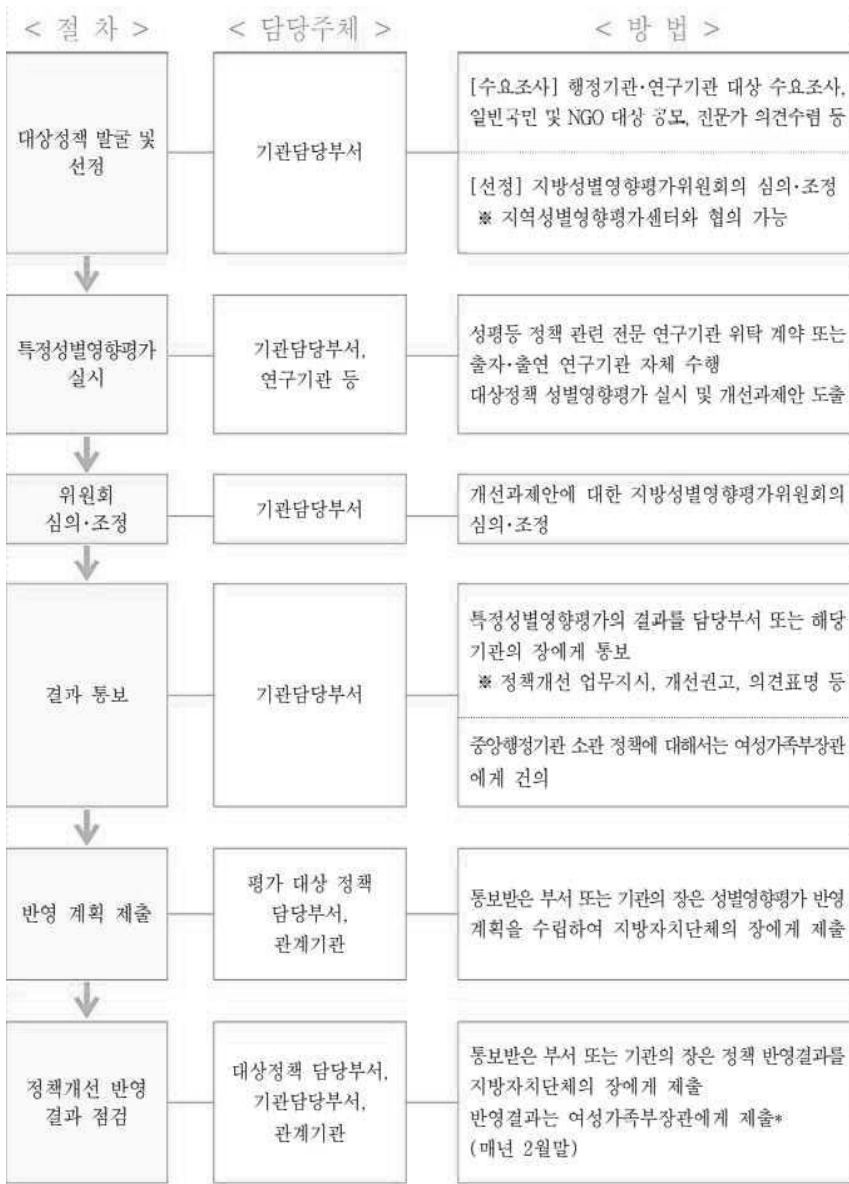
[그림 2-4]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2022), 성별영향평가지침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 자료: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2016)



[그림 2-5]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

자료: 여성가족부(2022), 성별영향평가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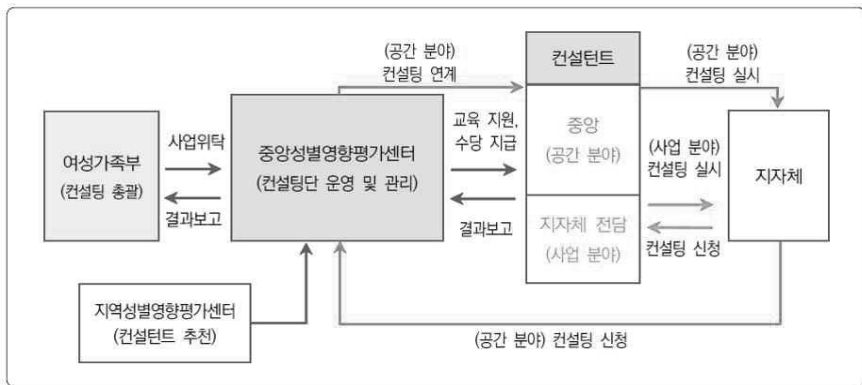
□ 시사점 2. (여성친화도시와 성별영향평가의 연계 방향)

① 성별영향평가의 공간계획 관련 컨설팅 기능 강화

-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사업, 법령, 홍보물 등에 대하여 해당 지표별로 사회적 불평등 또는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에 대한 요인을 제거하거나 조정하여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다만, 지표체계 또는 체크리스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별 실질적인 성평등 보다는 성평등에 위배 되는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여 권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경우, 그 내용이 도시의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에 관한 물리적 사항 또는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사·예측·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에 미리 그 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이와는 달리, 성별영향평가는 개인별로 인지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남녀 격차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객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영향성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앙-공간분야)와 (지자체전담-사업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지원하고 있음
 - 공간분야의 경우, 지자체별 여성친화도시 담당자가 요청한 컨설팅 신청 건에 대하여 각각의 대상정책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성평등(젠더) 관점에서의 설계수준, 접근방식, 영향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간분야의 경우, 단순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생활권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차원의 접근방식 즉, 공간포용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컨설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세부적으로는 생활권 내 주요 공공공간(공원, 녹지, 가로, 도로, 광장, 공공 문화체육시설, 편의·편익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상정되는 심의안건 및 자문안건을 비롯하여 자치구별 추진하는 주요 공간계획 및 공간조성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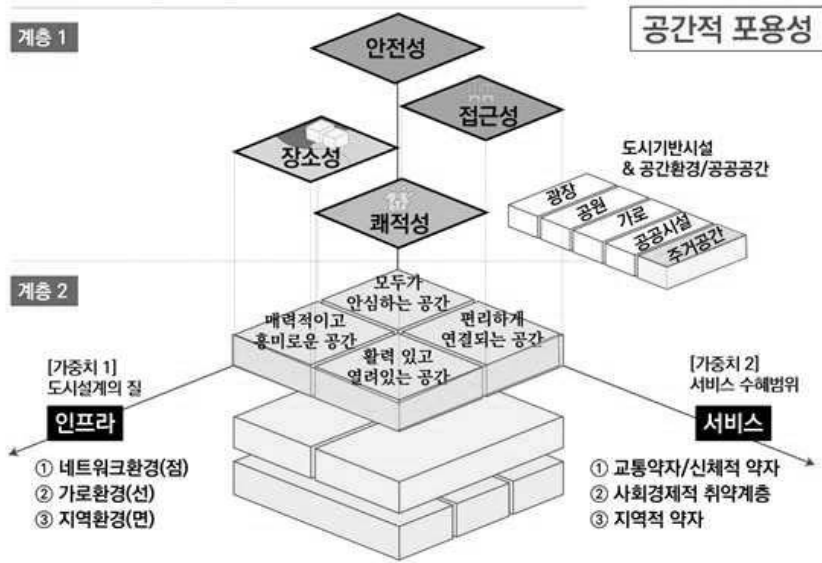
[그림 2-6]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1)

- ② 공간포용성 강화를 위한 계획지표-수요조사분석(현장조사 등)-가이드라인 구성
 - 계획지표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활용하여 성평등 도시 또는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을 위한 성과지표(사전평가)로 활용
 - 수요조사분석 :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성인지적 통계, 라이프스타일 분석, 성별 교차성분석, 연령대/세대별 수요 등을 분석하여 자료로 활용
 - 설계가이드라인 : 기초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성평등 공간조성에 관한 사후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에 대한 공간포용성 및 젠더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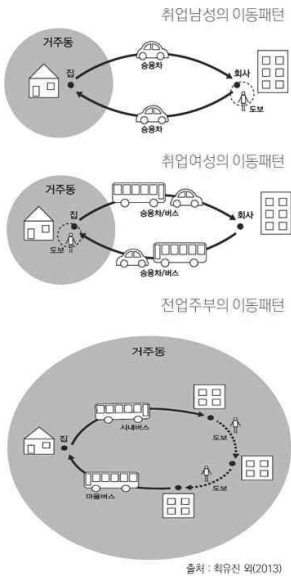
1. 계획지표 체계

성평등 도시 또는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을 위한 성과지표(사전평가)



2. 수요조사분석

- : 성인지적 통계, 라이프스타일 분석 등
- : 성별 교차성분석, 연령대/세대별 수요 등



출처: 최유진 외(2013)

3. 설계 가이드라인

성평등 공간조성 관련 사후평가

구분	분야	항목	주요 기준
도시계획 및 재생		접근성	여성의 공간이용 요구 및 특성 고려 기준 포함, 일-가정 양립 확산
		편의성	다양한 이용자 특성 반영, 이동편의 보장
		안전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의사결정 및 임파워링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여성주민의사 수렴 여부, 여성전문가의 의견 활용
이동편의		보행공간	보행로 유효폭, 단차, 재질, 기울기, 덮개처리
		이동안내	점자블록, 보도정비 및 차량진입 안전성
		대기시설	버스정류장 환경, 안내판, 안내기
		보행자 안전	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공공환경	공원	진입공간	접근로, 안내시설 정보, 주차장 안내, 보행통로
		이동공간	산책로 환경
		위생공간	화장실의 접근 및 다양한 이용자의 고려
		편의공간	안내시설, 돌봄공간(수유실 설치 및 구조 등) 휴게구역, 놀이터 등
	공공건축물	진입공간	주출입구, 유도 및 안내, 기울기, 휠체어 및 유도차 보관소
		이동공간	출입문, 복도, 경사로, 계단, 승강기 등
		위생공간	출입문, 바닥재, 출입문 관련시설, 변기설치 방법 및 경보장치, 시설 및 적정조도 등
		편의공간	편의시설, 안내시설
	돌봄휴식공간	실내 시설 출입문 및 바닥재, 보호자 관찰가능여부, 수유실 개수, 프라이버시, 안전성	

자료 출처: 경기도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2017)

2. 양성평등 정책 연계 공간계획

우리나라 법·제도상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015년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1996년~2014년)’을 개정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를 양성평등 사회라는 점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기본계획에 담고, 해당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5년~현재)

□ 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임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한 것임
- 초기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 실태조사 및 영역별 자문회의, 국민아이디어 공모,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였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분석 ('16.9 ~ 10월, '17.3월 공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7.1 ~ 11월)○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17.5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17.6 ~ 7월)○ 관계 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17.9 ~ 11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확정 및 발표 ('17.12월) |
|---|

초기 양성평등정책 추진경과 (2016~2017), 자료:여성가족부

- 주요내용 :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6대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음
 - 평등의식과 문화확산,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여성대표성 및 참여 활성화, 돌봄·육아 환경, 폭력근절 및 건강증진, 추진체계 등

구분	제1차 기본계획(중전)	제2차 기본계획(추기)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별격차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분야별 추진방향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학교교육, 미디어,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 청년, 재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기회 확대 ▶ 성평등임금 공시제 도입 등 성차별 개선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공공부문 중심 대표성 향상	▶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임원 비율 공개 등 민간부문 대표성 향상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자녀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 ▶ 성인지적 건강 증진 정책 기반 마련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성인지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그림 2-7]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차(2015년)와 2차(2018년) 내용 비교

□ 시사점 3. 공간포용성 차원 양성평등 정책과제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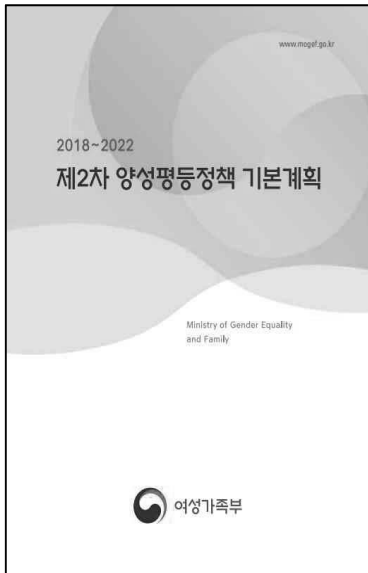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 중에서 공간계획 차원의 공공서비스 및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다루는 과제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이동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 양성평등정책 관련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계획 차원의 접근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다음과 같음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 지원, 여성친화도시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해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 정책 추진지원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일원화,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계자, 연구기관, NGO,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기반 공간계획 차원의 ‘성차별 공간조성 실태 모니터링’ 활성화¹³⁾
 -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간 컨설턴트(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일반 시민)이 매년 해당 시도에서 성별 격차를 반영하지 않거나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공간 구성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1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p.22; 정책과제 1-1. **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 향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 관련 공공서비스 기반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원 서비스 ▷ 한부모,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 돌봄양육 서비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양육(친화) 공간
 - 소통·참여 서비스 ▷ 형평성 기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류 공간
 - 보건·안전 서비스 ▷ 성폭력/젠더폭력 예방 및 여성건강 증진 공공 공간
 - 이동편의 서비스 ▷ 성별 이동패턴과 이동약자를 배려한 이동 공간

5. 주요 핵심과제

대과제	주요 핵심과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육 강화 ▶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17년) 500인 이상, (18년) 300인 이상, (19년) 전체 확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
여성특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 일본교·워인부* 피해자 기립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 기념사업 추진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그림 2-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상 정책과제

2) 국가성평등지수

□ 지표체계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3대 영역(8개 분야) 총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 복지, 보건, 안전)
- 성평등 의식·문화 (분야: 가족, 문화·정보)

국가성평등지수 (Gender Gap Index)

자료 출처: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2021)
; 주재선 외 3인(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단위: 관련 성평등=100.0)

2020년 기준 74.7점 (완전 성평등 100점 기준)

GGI (성평등지수) : 102위 (전체 15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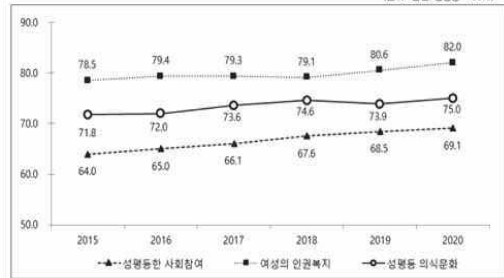
전년 대비 유사 업무 임금 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은 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했으며, 건강기대수명은 순위와 점수 모두 하락함.

GDI (성개발지수) : 111위 (전체 189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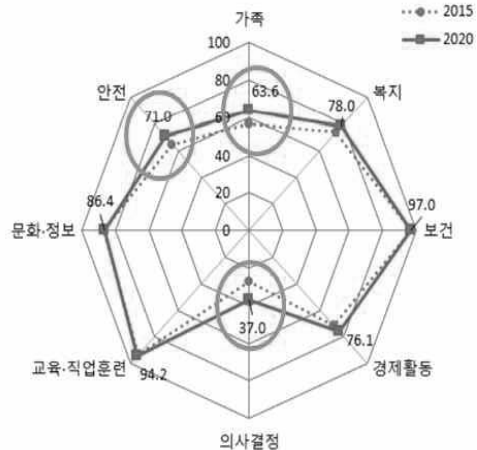
GII(성불평등지수) : 11위 (전체 189개국)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국회의원 비율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행정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참여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비전망근로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안전 의식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셋째 이 이상 출생생애 가족관계 만족도 아이휴식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2-9] 국가성평등지수(GGI) 현황

자료: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2021), 주재선 외 3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표 2-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및 분야별 가중치

자료: 여성가족부(2021), 국가성평등보고서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강력범죄(흉악법) 피해자 비율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성별 정보화 격차

[분야별 가중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0.19	0.13	0.14	0.13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0.10	0.12	0.11	0.08

3) 지역 성평등지수

□ 지표체계

- 지역 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보급된 것임(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표 2-7] 지역 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정책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자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성평등 인식·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 지역 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수의 항목(3대 정책영역 및 8대 분야)은 일치함. 다만, 일부 지표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복지 분야 각각 1개씩 삭제하여 총 23개 지표로 조정되었음
 - 단, 분야별 가중치는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은 값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 성평등지수와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간 차이점

- 의사결정 분야
 - 국회의원 비율 vs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vs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
- 교육·직업훈련 분야
 - 직업교육훈련경험 비율 삭제
- 복지 분야
 - 비빈곤 가구주 비율 vs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장애인고용률 삭제
- 문화·정보 분야
 - 성별 정보화 격차 vs 인터넷 이용률

4) 공간포용성 지표

□ 지표체계

- 공간포용성 지표(염인섭, 2020)는 기존 선행연구¹⁴⁾에서 포용도시 현황 진단과 목표설정(준비단계)에서부터 기초 평가항목 설정(1단계), 포용성 세부지표 구성(2단계), 가중치 설정(3단계) 등의 과정을 거쳐 제시된 것을 활용하되, 가중치는 양성평등 정책 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함

14)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공간포용성 지표는 포용도시의 핵심 아젠다(4) 즉, 장소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측면에서 생활권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복합되어 있음

[표 2-8] 대전시 공간포용성 본 지표 도출(안) - 복합지표 적용

공간 유형		공간포용성 세부지표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중요도)	
				인프라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생태 공간 (E)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서비스 면적비율(%) 행정동별 공원면적(㎡/인) 서비스 범위 내 공원(개) 공원 네트워크 (시간)거리 	장소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공간	입체적 도시 인프라 접근여부	사람중심 공간 서비스 제공여부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서비스 면적비율(%/인) •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의 만족도 • 근린공원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 생활권 인접 녹지공간 만족도 • 생활권 인접 수변공간 환경 만족도 *3대 하천 + 지천 인접지역 			
이동 편의 (T)	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편의 지수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개소) 이동편의시설 적합 설치율(%) 교통약자 교통수단 보급수준 	접근성 편리하게 연결되는 공간	가로 환경 (선)	주거 약자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전용도로/보차혼용도로 비율 • 보행 인프라 관련 이동편의 만족도 • 버스/지하철 이용환경 만족도 • 가로시설물 적합성 수준 • 보행친화적인 가로환경 만족도 • 자전거도로 이용환경 만족도 			
공공 시설 (P)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화장실 접근성 노인/영유아 돌봄시설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 	안전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	네트워크 환경 (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공공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문화체육시설 밀도 • 주민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 야간보행 위험성 수준 • 공공문화시설 이용환경 만족도 • 초·중·고 통학권 안전성 수준 • 공공시설 간 연계·활용성 수준 • 주변과의 교통수단 연계환경 			

- 세부적인 지표설정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공간포용성 예비지표(총 22개 항목)를 중심으로 포용성 평가항목(장소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별 영향력을 평가하여
- 생활권 내 대상지 공간유형(생태공간, 이동편의, 공공시설)별로 전체적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하고 있음

(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준비 단계	대전시의 포용도시 현황진단과 목표설정	지표 속성 Positioning 1 • 전반적인 포용도시 진단지표 Positioning 2 • 공간포용성 진단지표
1단계	공간 포용성 인지도 기초 평가항목 설정 ① 장소성 평가항목 ② 접근성 평가항목 ③ 쾌적성 평가항목 ④ 안전성 평가항목 *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관련 시민체감형 정성지표로 구성	평가 항목 • Who/What (정책 수혜자) 정책 수혜자 대상 Needs 파악 : 모든 시민(약자) 대상 설문조사 • How to (요구도) 생활권별 공공공간(시설)의 개선 필요도와 결핍정도 파악 : 정책적 요구사항(Needs) 반영 • Where (적용 대상지) 공동체 생활권 기반 대상범위 설정 : 지역적 약자 배려
2단계	공간 유형 고려 포용성 세부지표 구성	공간 유형 ① 친환경 생태공간 포용성 지표 ② 편리한 이동편의 포용성 지표 ③ 다양한 공공시설 포용성 지표
3단계	공간 포용성 확대 가중치 설정	• 전문가 집담회 (FGI) • 선행회귀분석 (상대적중요도)

[그림 2-10] 공간포용성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분석내용

자료: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공간포용성 지표의 성평등 도시계획에의 적용

○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 정책과 포용도시 정책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공간적 포용성’ 강화를 위해 설정된 기존 지표체계의 주요 항목과 공간유형별 세부지표, 가중치(인프라+서비스)를 적용함

→ 다만, 성평등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 측면에서 가중치는 양성평등 정책적 여건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1] 생활권 차원 공간포용성 지표체계 구조
 자료: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절. 성평등 도시계획 사례 고찰

1. 관련 사례연구 고찰

1) 캐나다 밴쿠버 성평등 정책

□ 형평성 관점의 도시계획적 접근

- 밴쿠버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평등이 아닌 형평성 관점의 전략을 도입하였음
 -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호 교차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단순한 양적 평등(equality)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평성(equity) 관점을 반영함
 -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양한 시민들이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 차이와 격차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채워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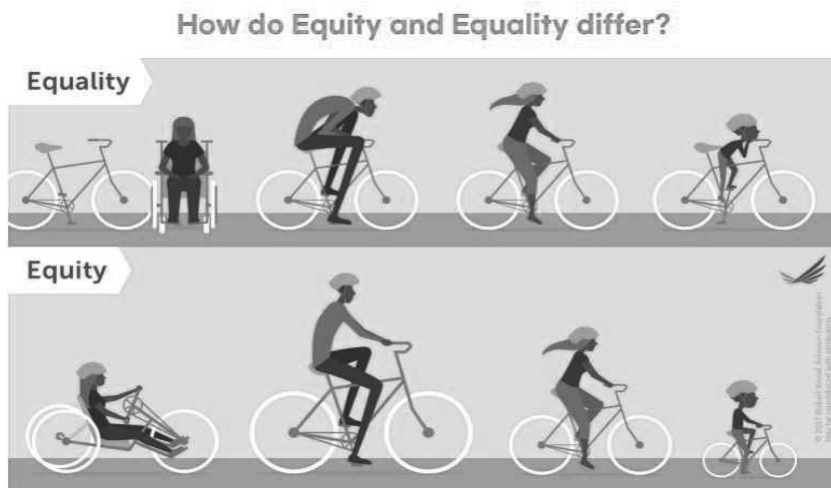


사진 출처: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Visualizing Health Equity: Diverse People, Challenges, and Solutions Infographic - RWJF

[그림 2-12] 밴쿠버의 형평성 관점의 도시계획적 접근방법

문기현(2021), 젠더이슈 2021년 제17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벤쿠버의 교차성(Intersectional Lens) 적용은 성, 연령, 장애, 소득, 인종, 민족 등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이 상호 교차하여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주요성과 및 시사점

①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 시정 전반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형평성 관점 반영을 위한 계획지침을 개발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정리함
 - 형평성 프레임워크 (Equity Framework)¹⁵⁾ 완성·채택(2021.7)
 - 개방형 포털사이트 운영(open data portal)¹⁶⁾ : 젠더 리포트(Gender Report)를 비롯하여 관련 성별 통계자료 등을 게시

② 성평등 사회참여 확대

- 여성 비율이 낮은 직군(기술·소방·IT 계열 등)의 여성 고용 확대와 관리직 여성 비율 확대

소방서 개조를 통한 한부모 주거 시설 지원



*남은 소방서를 개조하여 소방서 위층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 시설로 증축. 사진 출처: <https://ywcavan.org/blog/2019/12/grand-opening-ywca-pacific-spirit-terrace-and-fire-hall-no-5>

③ 돌봄양육 공간 조성

자료: 문기현(2021), 젠더이슈 2021년 제17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육시설 1,000개 추가 개설 목표 달성
 - 총 1,144개 신설 및 2,300개 추가 신설 예정

④ 여성친화형 주거공간 지원

- Housing Vancouver Strategy에 형평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을 위한 전략적 주거지원 정책 수행

15) 이것은 형평성의 개념, 시정전반 형평성 관점 반영의 필요성,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형평성 관점 적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초 추진 전략이다. 벤쿠버시는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형평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16) <https://opendata.vancouver.ca>

- 실제로 밴쿠버시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Olivia Sky House(여성을 위한 198개 스튜디오 및 원룸 추가), Aneki House(여성을 위한 공간 39개 지원) 등 주거 공간에 여성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오래된 도서관, 소방서 등 공공시설을 개조하여 여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합 주거(지원) 공간을 조성하였음

2)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페미니스트 관점의 도시계획

바르셀로나 시는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지침을 비롯하여 분야(도심개발, 주택, 상업공간, 공공시설, 교통, 야외공간 등)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행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젠더 이슈와 과제를 다루고 있다.

□ 교차성 젠더관점 도시계획¹⁷⁾

- 민간주도의 성평등한 도시전략¹⁸⁾을 도입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시는 그동안 백인 중산층 남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왔던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음
- 특히, 성평등한 도시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의 일상과 생활양식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포괄하는 형태의 ‘교차성 젠더 관점’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하고 있음. 이는 도시공간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돌봐주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여성(사회적 약자의 대표)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일명, 페미니스트 도시계획체계를 강조하고 있음

17) 손문금(2013), 성평등 도시공간과 살기 좋은 마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8) 문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밴쿠버시가 도시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도시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것과 달리, 바르셀로나시의 성평등 도시전략은 민간 주도(Bottom-up)적 특징을 갖는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Col lectiuPunt6임.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여성 건축가, 사회학자 및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기관(2005년 설립)으로, 도시 계획에 여성을 포괄하고 교차성에 입각한 페미니스트 관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함

- 첫째, (돌봄) 시민의 일상과 돌봄을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로 둘 것
- 둘째, (안전)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
- 셋째, (참여) 여성의 적극적인 도시계획 참여를 보장할 것

□ 페미니스트 도시계획체계 도입

① 돌봄(Care)의 가치를 인식하고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으로 설정

-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되, 도시의 개별구성원(시민)에 대한 돌봄정책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간환경도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있음
-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을 고려한 공간구성의 핵심을 돌봄(Care)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음

②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도시공간 조성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이 도시공간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시공간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보장함
- 페미니스트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안전한 도시공간은 다음과 같은 6대 기본원칙이 적용됨
 - (Vital) 다양한 활동이 가능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 (Surveilled)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성 점검이 가능한 도시공간
 - (Equipped) 연령·계층·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교류, 여가문화 증진,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 (Signposted)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표지판, 안내문구 등이 설치된 도시공간
 - (Visible) 각종 재해를 비롯한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대피경로, 비상구, 출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공간
 - (Communication) 모든 시민이 소속감을 느끼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웃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체 차원의 참여 기반을 갖춘 도시공간

③ 여성이 참여하는 페미니스트 도시계획 체계 구축

- 도시계획 전 과정에 걸쳐 여성이 전문가로 참여하여 도시공간 내 불평등한 요소들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
 - 1단계(워크숍) : 페미니스트 도시계획 개념과 접근방법 공유
 - 2단계(도시공간 진단) : 그룹견기를 통한 공간탐색 → 다양한 이웃과 관계자 인터뷰 → 진단 내용 공유를 위한 워크숍 진행
 - 3단계(도시공간 개선) : 워크숍을 통한 도시공간 진단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계획을 마련함
- 이는 일종의 시민참여 또는 공동체 주도의 계획체계를 의미하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공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요자 맞춤형 접근방식에 해당함



사진 출처: Col·lectiuPunt6 UN CSW 발표 자료

[그림 2-13] 바르셀로나 페미니스트 도시계획의 기본원칙(돌봄, 안전, 참여)
 자료: 문기현(2021), 젠더이슈 2021년 제17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시사점

- 바르셀로나시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계획체계에서 실제 도시공간 이용자인 여성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도시공간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의 상향식 도시계획체계를 실현하고자 하였음
- 돌봄이라는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의 구성원과 공간환경 전체를 돌봄의 대상이라고 보고,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수단)을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성평등 도시전략은 생활 속에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는 ‘교차성 젠더 관점’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을 계획 함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개방적인 계획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3) 여성친화도시 유엔공동계획 (UNJP)¹⁹⁾

‘여성친화도시 유엔공동계획(UNJP, Women Friendly Cities UN Joint Programme)은 도시계획의 성주류화를 목표로 2006년 터키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유엔 산하의 관련 기구와 터키 정부, 지역 파트너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였다. 유엔공동계획은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의 긴밀한 협력 증진, 여성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및 지역 행정가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 1차 사업(2006년~2010년)

- 유엔공동계획의 1차 사업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1일 시작됨
- 유엔공동계획에서는 지역평등행동계획을 개발하여 지역 정책 및 행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19)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pp.111-122에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함

- 지역평등행동계획은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도시 서비스,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적 권한 강화, 공적인 삶,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이주 및 빈곤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함
- 관련 활동 및 담당자와 참여자 기술교육, 성인지 교육, 성인지예산 교육, 사업 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함
- 유엔공동계획이 진행되면서 지역의회에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정책결정사항에서 성인지성, 정책이행 모니터링, 여성권리 옹호, 성평등 분야 관련 단체와 협력 등을 지원함

□ 2차 사업(2011년~2015년)

-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사업의 파트너로는 스웨덴의 국제협력기관인 SIDA가 참여하였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지역단위에서의 성평등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소액보조금 사업을 진행함
- 2차 사업은 지역평등행동계획에 따라 정부의 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이니셔티브와 서비스가 이행되고, 여성친화도시의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지속가능성을 염두하여 내무부, 의회평등위원회, 여성권위담당처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함

□ 주요사례

- (스웨덴 배스터로스) 유럽 지방자치 위원회(CEMR,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는 스웨덴 배스터로스가 도시계획에서 도로, 주차장, 레저-편의시설, 녹지 등 설치 시 여성과 남성의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부가 공익을 위한 사업에 성주류화 접근을 반영하여 차별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독일 베를린) 2008년부터 독일 베를린시는 성평등 정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GPR,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Program)을 실시하고 시정부의 모든 부서는 성평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

- 계획단계에서 공간의 다양성과 유연성,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조성, 사회적 관습의 다양한 대안 제시, 일가정의 양립 안전,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성 고려, 참여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도시계획을 추진
- 도시계획 및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성인지적 기준을 제시함

□ 시사점

- 유엔공동계획에서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는 모든 도시에서 여성이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구직 기회 및 포괄적이고 양질의 도시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함
- 또한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하고, 지방정부가 여성의 문제와 관점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 및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의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으로 유엔공동계획의 목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4] 유엔공동계획의 여성친화도시 개념

자료: 조선주 외(2017)

2. 성평등 도시공간 개념과 적용 사례

1) 성평등 도시공간 개념과 구성방법

□ 성평등 도시계획 차원의 핵심 이슈

- 핵심이슈 : 손문금(2013)²⁰은 성평등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를 일자리, 돌봄, 일-삶의 조화, 안전성, 이동성과 접근성, 환경, 공동체와 소통, 여성참여 등으로 정리하고 있음²¹)
- 도시계획에서 성평등 문제 : 개인의 욕구를 도시환경 속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임²²)
 - 성평등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은 개인이 도시공간 속에서 욕구 실현을 위해 생활환경을 기획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공간이라는 공공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생활양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성평등 도시공간의 정의 : 다양한 요구와 차이를 반영한 생활공간

- 성평등 도시공간이란 여성과 남성의 도시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반영한 도시공간 배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의 공간선택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의 생활공간(손문금, 2013)
- 다양한 시민의 공간사용 방식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공간을 선택·배치하고, 개발을 수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성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생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20) 손문금(2013), 성평등 도시공간과 살기 좋은 마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1) 국내에서 도시개발 및 시설설치 사업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의해 추진된 연구들에서 제시된 젠더이슈에 대하여 정리함

22) 손문금(201) 전개서; 개인이 생활환경을 기획하는 도시계획에서 남녀차를 인식하고 이들의 개인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환경 내 성평등 문제가 경제활성화 및 사회통합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함

- 성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공간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참여 중심의 성평등 공간계획이 중요

-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91)는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도시공간의 동질성이 다양한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조성(공간적 실천)²³⁾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성을 끌어안는 차별화된 공간의 출현을 제안한 바 있음 (손문금, 2013; 재인용)
- 이에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생활양식과 생애주기, 생활환경 욕구 등을 실현하는 방안이 요구됨
- 특히, 성주류화 또는 성평등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수적임
 -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례처럼 도시계획 전 과정에 걸쳐 여성이 전문가로 참여하여 도시공간 내 불평등한 요소들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성평등 도시공간 구성의 원칙 : 일과 돌봄의 경계

① 일·생활 통합 ▶ 특화된 공간구조

- 업무공간과 돌봄공간 간 접근성과 근접성에 관한 문제로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 및 시설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② 열린 커뮤니티 ▶ 서비스 접근성 (이동편의)

- 개인이 일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돌봄환경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예컨대, 국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수혜자)를 중심으로 3대 서비스(건강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를

23) 공간적 실천이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지각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장소, 지역적인 것과 총체적인 것의 관계, 이러한 관계의 재현, 행위와 기호, 보편화된 일상적 공간, 상징들로 이루어진 특권적인 공간을 동시에 규정한다.

市(시)~區(구)~洞(동) 행정조직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관련 복지기관들이 참여하여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성평등 관점에서는 일·생활 통합 또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커뮤니티 서비스 등과 관련된 공간구조 자체를 돌봄서비스에 기초한 (공간)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이 요구됨

③ 생활안전 ▶ 안전한 공간디자인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안전한 영역성, 자연감시, 안전한 장소 이미지와 주변 환경, 대중교통수단 이용편의 등 공공공간(공간환경), 이동공간(수단)의 안전성 확보

④ 이동성 ▶ 이동수단, 연결공간

○ 이동의 연속성 확보,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결, 안전한 이동환경 등

[표 2-9]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젠더이슈(목표, 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원칙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커뮤니티 허브를 통한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마련
		근린 규모로 분절된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
생활안전 (Safety)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	Public Eye를 통한 일상공간의 안전성 확보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이동의 안전성 확보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커뮤니티 허브의 연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시설 및 오픈 스페이스
참여와 제도 (Participation & System)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도시공간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보장
		성평등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확보

⑤ 다양성 ▶ 서비스 디자인

-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토지이용, 활력있는 공간환경, 다양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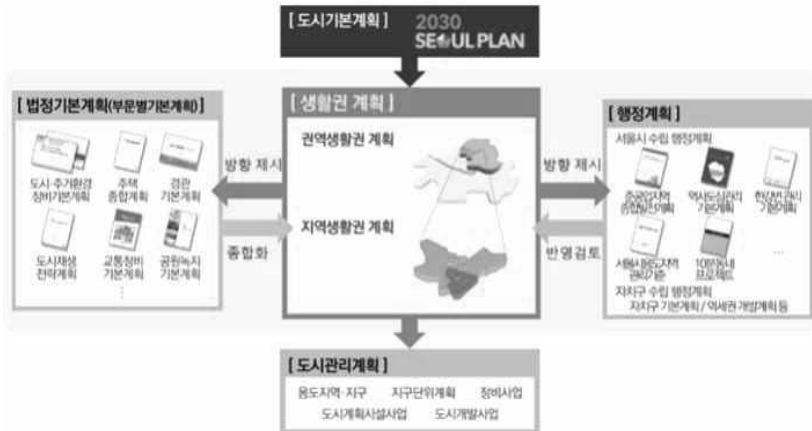
⑥ 참여와 제도 ▶ 시민참여형 디자인

- 모든 사람들의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을 고려한 계획체계

2) 성평등 핵심이슈 도시기본계획 적용 사례, 『2030 서울플랜(2014)』

□ 2030 서울플랜의 주요 내용

-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을 수립 과정에 초기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미래상과 핵심이슈 분과를 설정하고, 주요 전략과 분야별 사업들을 계획하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2012~)’을 구성함



[그림 2-15] 2030 서울플랜의 기본구조

자료: 서울특별시(2014)

- (도시기본계획) 분야별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이슈별 『목표-현황과 과제-기본방향-주요지표』를 구성 후, 전략을 수립하는 구조임
- (생활권 계획)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실제 생활공간에 적용 가능한 전

략계획을 권역별·자치구별 생활권 단위로 권역별/지역별(자치구)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중심자일자리/주거지 관리 및 개선/교통체계 개선/생활기반/지역특화) 계획과제와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구조임

□ 성 평등한 도시공간 계획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 (성평등 관련 핵심이슈 반영) 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핵심이슈를 아젠다 형태로 반영함으로써 실행전략으로 구성

-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 등



[그림 2-16] 2030 서울플랜 핵심이슈 선정 과정
자료: 서울특별시(2014)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손문금 외(2012)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와 제57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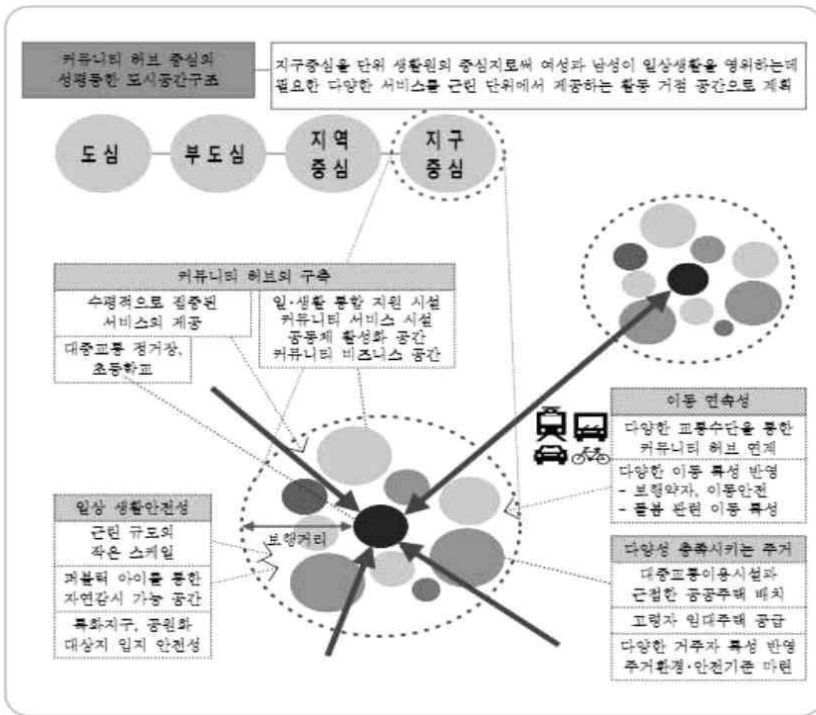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p> <p>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p>	<p>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p> <p>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생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p> <p>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의 사회·문화적 요구,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7조 (구성 및 운영)</p> <p>③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7.30></p> <p>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정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개정 2008.7.30, 2010.1.7></p>	<p>제57조 (구성 및 운영)</p> <p>③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7.30></p> <p>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성평등·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정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p>

자료: 손문금 외(2012),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모델개발 연구

- 그 결과, 제4조의 ⑤는 일부 개정·신설(2014.10.20.) 되었으나²⁴⁾ 제57조의 성평등 관련 전문가 참여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개정되지 못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435호, 2022. 7. 11., 일부 개정]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0.>

□ 서울시 성평등 도시공간 계획 모델 제안: 생활권 차원 지구단위계획에 적용



[그림 2-17] 서울시 성평등 도시공간구조(안)

자료: 손문금(2013), 성평등 도시공간과 살기 좋은 마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토지이용계획의 틀에서 자유로운 복합개발 공간구성방식 채택, 대규모 고밀복합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근거리에서 작은 규모로 커뮤니티 활동 거점장소의 확보,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공공의 시선(public eye)을 통한 일상생활의 안전성 강화,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출 등 제시”

24) 2022년 10월 현재,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1>’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성평등 관련 원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3)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서의 성주류화²⁵⁾ 개념

□ 성인지 도시계획

- 정의 및 현황 : 비엔나시가 2013년 발표한 「도시계획 및 개발에서의 성주류화」에서 밝힌 성인지 도시계획은 유럽연합 삶의 모든 분야와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및 동등한 기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여성과 남성 중 아동과 노인을 위한 계획이 성인지 도시계획 문화의 기본이며 소외되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도시계획 및 개발에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 : 비엔나시는 여성과 남성의 삶이 다름을 인지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분권화된 도시 구조에서 다양한 공공시설 및 생활시설을 도시 전체에 분산시키고, 공공 교통을 통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략을 세움
 - 또한, 공공시설 및 공간의 질 향상, 친환경 공공 교통을 통한 시설 접근성 향상, 안전한 무장애 도시를 목표로 성인지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성인지 도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연령별 요구 및 영향을 평가하고 종합계획과 디자인 개념,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개발자 경쟁, 개발자와의 협의, 사업계획과 자세한 위치 계획 등 목표 설정의 기준을 정함

□ 도시계획에서의 성주류화 3단계

- 1단계 :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개념 및 비전 설정에서의 성주류화는 도시 디자인의 개념, 비전,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바탕이 됨
 -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 공급과 공공공간에 대한 바탕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함
 - 젠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단체 및 전문가의 확보, 모니터링 및

25)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pp.142-157에서 제시한 오스트리아의 도시계획 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함

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

- 2단계 : 토지이용 및 개발에서의 성주류화는 1단계에서 설정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개념, 비전을 풀어내는데 어떤 방법 또는 접근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내는 과정임
 -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과 필수 요소들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3단계 : 공공공간 계획, 주거공간 및 공공서비스 건물에서의 성주류화는 다양한 사용자 집단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단계임

[표 2-10] 비엔나시의 성인지 도시계획의 목표 및 내용

자료: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대주제	중점분야	내용
도시 구조, 공간 생성 및 주거의 질 (urban structure, space creation and housing quality)	도시구조 일반	- 지역에서 질 좋은 주거를 위한 세이프가드 - 적당한 건물 크기에 따른 촘촘한 네트워크 - 공공 공간, 광장, 개방 공간에 따른 효율성 설정
	지역센터 개발과 지역 상점 및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개발 - 쇼핑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깝고 쉬운 접근성 향상
	사회적 인프라	- 체계적인 계획과 모든 집단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 유치원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치, 장소 크기, 장소의 배치, 건물의 높이 등의 고려
	주거 공간 건축 및 개방되고 친환경 공간	- 다양한 범위의 시설물 유형분류체계와 임차 기간 또는 건물 소유관계, 재정 및 비용발생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디자인 - 지역주민과의 좋은 관계 - 일상이나 아동의 놀이시간 등을 위한 개인의 공간과 공동의 공간의 구분
	목표 및 개인이 인지하는 안전성 개선	- 지역에서 효과적과 명백한 공간방향 설정과 사회적 관리
공공 공간과 이동성 (public space and mobility)	공공 개방 공간	- 도시 생활을 고려한 공공 개방 공간 디자인 -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사용자 중심 배분
	이동성	- 사용자에게 따른 거리 공간의 분리 - 보행자와 자전거 배려 - 공공교통

□ 도시개발 계획 (Step 2025: Urban Development Plan Vienna)

- 중장기 도시계획인 「STEP 2025」은 도시 구성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도시개발,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2014년 발간함
- 「STEP 2025」은 비엔나가 수립한 최초의 도시개발 계획으로 9가지 원칙을 세우고 「STEP 2025」 실행을 위한 단계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도시개발 계획을 위한 9가지 원칙은 살만한 도시, 사회적으로 평등한 도시, 성평등한 도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 코스모폴리탄의 도시, 번영하는 도시, 통합된 도시 지역, 친환경 도시, 참여하는 도시임

□ 성인지적 주거사업 『Frauen-werk-stadt(women-work-city)』²⁶⁾

① 비엔나의 공공주택 사업의 변화

- 1970년대 비엔나의 도시 재개발은 사회적, 주거자 중심의 전략이 수립되었고, 공공주택에 있어 참여적인 도시계획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사업이 진행되었음
- 이후 1990년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적인 건축계획 즉, 친환경적, 아동친화적, 노인을 위한 주거지 등이 계획됨

② Frauen-werk-stadt 사업의 주요 내용

- 여성에게 맞춰진 도시계획 접근에 의해 추진된 주거사업으로 주변 인프라 및 주거공간 계획에 여성 건축가와 도시계획가가 직접 참여·설계함
- 359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 및 유치원, 보육시설, 의무실, 경찰서, 상점, 주민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함
- 주거단지에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고 유치원과 약국, 의사가 상주하여 친가족적이며 유모차와 자전거 보관소, 세탁실 등을 크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설계하는 등 여성의 생활상에서 일상적인 필요에 맞춰 여성친

26)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pp.150-152에서 제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함

화 주거단지를 건설함



자료: City of Vienna, Frauen-Werk-Stadt I, <https://www.wien.gv.at/stadtentwicklung/alltagundfrauen/wohnbau.html>에서 2017.9.11. 인출

[그림 IV-2] Women-work-city 1차 사업



자료: City of Vienna, Frauen-Werk-Stadt II, <https://www.wien.gv.at/stadtentwicklung/alltagundfrauen/wohnbau.html>에서 2017.9.11. 인출

[그림 IV-3] Women-work-city 2차 사업

자료: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익산시(2009), 여성친화 창조문화도시 발표자료

[그림 2-18] Frauen-werk-stadt 사업의 주거단지

- 입구와 계단은 짧고 투명하게 설계하여 채광이 잘되도록 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통해 위험 장소를 줄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설계함

- 공공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타 생활 편의시설, 학교 및 직장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함
- 4가구에 1개의 사회적 공간을 배치하여 이웃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

□ 성 주류화 시범지구 『마리아힐프지구』

① 마리아힐프지구 조성 과정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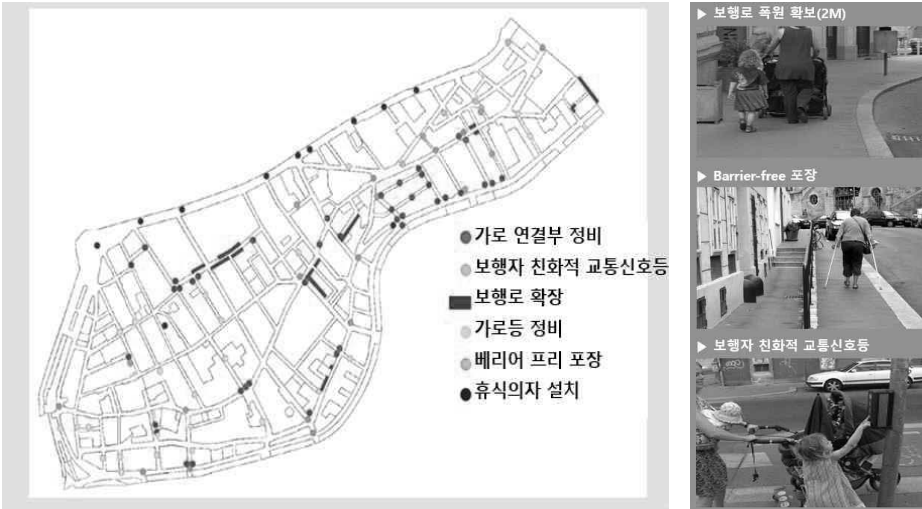
- 마리아힐프 지역은 2002년 성 주류화 시범지구(Gender Mainstreaming Pilot District)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계획국(the Executive Office for Urban Planning,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여성생활체감도시 계획건설조정기구(the Coordination Office for Planning and Construction Geared to the Requirements of Daily Life and the Specific needs of Women) 주관으로 그 과정을 지도하고 7개 부서가 참여함(여성가족부, 2010)
- 마리아힐프지구는 여성 보행자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② 마리아힐프지구 주요 성과

- (보행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로 코너의 보행자 시야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마련, 도로 폭 확장, 무장애 거리, 가로등 정비 등
- (보행자 친화적 교통환경 구축) 보행자 신호조절기 설치,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섬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여성의 일상적인 요구 반영)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교통이용 패턴 반영, 유모차를 고려해 계단 측면에 경사로 설치, 보도 폭 조정(2m 이상), 여성의 안전을 염두에 둔 대중교통망 마련 등



자료: 부천시의회(2012), 국외연수결과보고서-‘유럽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자료: 익산시(2009), 여성친화 창조문화도시 발표자료

[그림 2-19] 마리아힐프지구 조성사례

분석의 틀

1절 성평등 도시계획 개념과 기본구조

2절 교차성과 공간포용성 연계구조

3절 성평등 도시계획 지표체계

3장 분석의 틀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고찰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정책과 주요 성평등 지표체계를 비롯하여 성평등 도시계획 사례 및 성평등 도시공간 구성 방안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형평성 관점의 성평등 도시계획체계의 기본 구조와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절. 성평등 도시계획 개념과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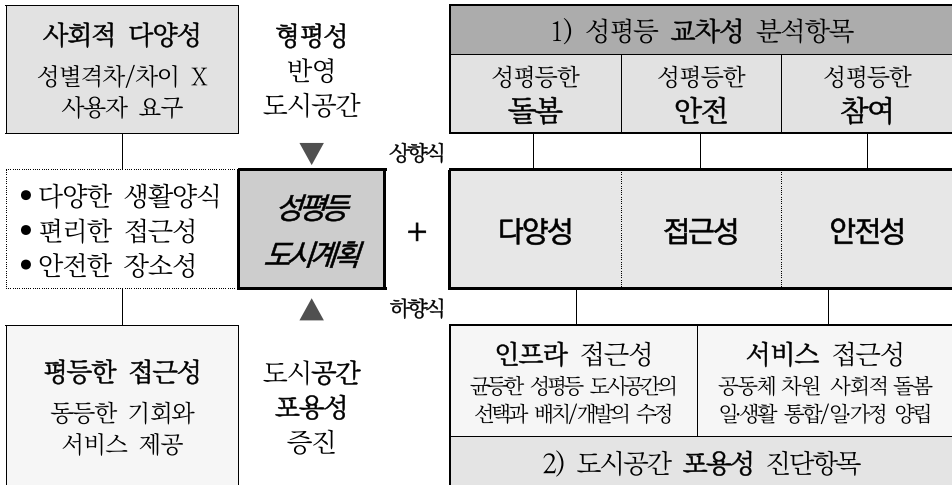
2016년 유엔 해비타트가 발표한 신도시 의제(슬로건: “모두를 위한 도시 (Cites for All)”)의 기본원칙 중에서 제1원칙이 ‘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은 도시공간에서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의 다양성, 공간의 통합, 공공 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동등한 접근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도시계획 자체는 포용도시의 틀(framework)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도시공간의 이용주체(시민)의 모든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정리하면, ‘포용도시 관점에서의 성평등 도시공간’은 모든 사용자(교차성-사회적 다양성)의 공간적 요구와 도시공간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포용성-평등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모든 도시구성원(시민, 사람)에게 도시공간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형평성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간 자체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평등한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포용도시에서 강조하는 도시차원의 공간개입 즉, 모든 거주민의 의미있는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존 도시계획체계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국가나 시장의 개입에 의해 도시개발 또는 도시공간을 하향식 위주로 조성해왔다면, 이제부

터는 도시공간의 주권을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특정 계층 인구(신체적 약자, 기능적 약자, 지역적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등의 그룹)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표 3-1] 포용도시 관점의 성평등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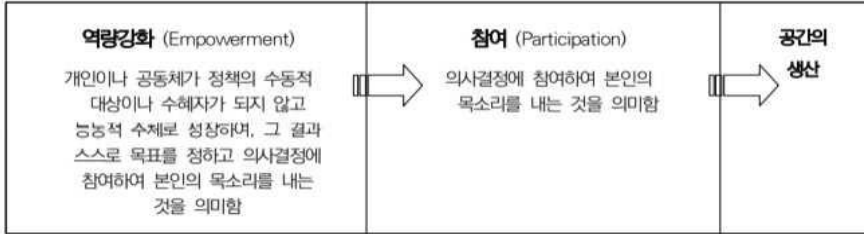


이러한 성평등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성별 차이나 격차가 없는 공간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모든 사람에게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와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하향식 접근방식이 필요하지만, 주민공동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김수진(2019)²⁷⁾은 포용도시 담론의 한계를 거주민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주민의 무조건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평등 도시계획은 모든 거주민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 관점이 아닌 정책 결정자 또는 사용자 관점에서 모든 거주민이 도시공간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은 형평성을 유지하되, 이로 인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효율적

27) 김수진(2019),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국토연구원

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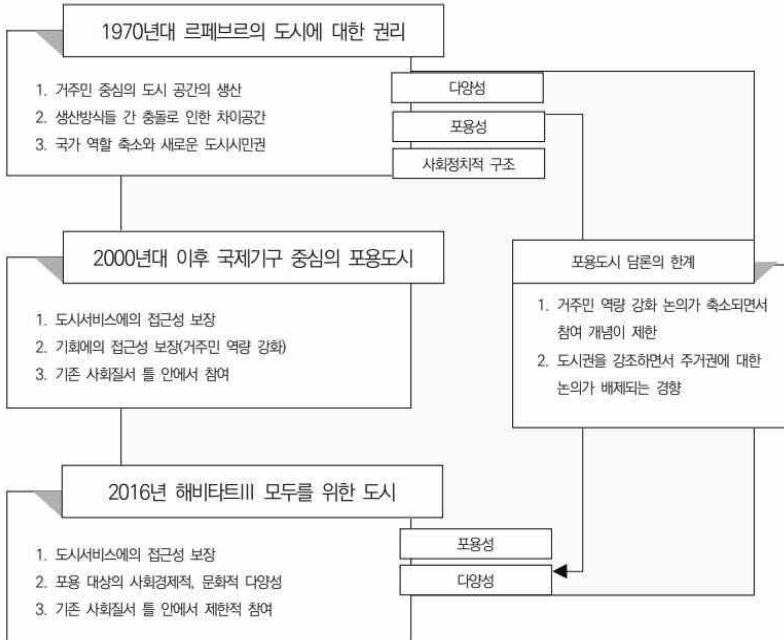


자료: Streeten.P. 2002. Empowerment, Participation and the Poor. Occasional Paper. NY: UNDP. 내용 재구성

[그림 3-1] 거주민의 역량강화와 참여에 의한 공간의 생산 과정

자료: 김수진(2019),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국토연구원

이렇듯 성평등 도시계획은 거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안전한 장소성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형평성 차원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림 3-2] 포용도시 담론의 발전과정과 한계

자료: 김수진(2019),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국토연구원

2절. 교차성과 공간포용성 연계구조

앞서 정리한 대로 성평등 도시계획은 사회적 다양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의 개념과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공간(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포용도시』의 개념이 연계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첫째,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핵심가치, ‘돌봄’, ‘안전’, ‘참여’를 『교차성 분석항목(A)』으로 제시하여 성별 영향력을 파악한다.
- 둘째,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선택과 (재)배치, 도시개발의 수정 등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접근성’과 공동체의 돌봄환경과 일가정 양립 관련 ‘(생활)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포용성 진단항목(B)』으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

【표 3-2】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의 연계 구조

공간 유형		성평등 가치실현	(양성평등) 교차성 분석항목 [A]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한 돌봄	성평등한 안전	성평등한 참여		
생태 공간	공원		▼	▼	▼	소통참여 서비스 (교류 공간)	
	녹지						
이동 편의	가로		다양한 생활양식 / 사람중심 서비스 디자인			균등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 (창업지원 공간)	
	도로						
공공 시설	학교					보간안전 서비스 (여가문화 공간)	
	공공청사		편리한 접근성 / 모든 사람(약자) 배려				
	문화시설					이동편의 서비스 (가로/도로 공간)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안전한 장소성 / 공동체 기반 생활권 환경			돌봄양육 서비스 (돌봄양육 공간)	
	청소년수련시설						
	편의시설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 공간)	
편의시설		▲	▲	▲			
도시계획시설 △		형평성 관점 반영	인프라 접근성 균등한 성평등 도시공간의 선택과 배치/개발의 수정	서비스 접근성 공동체 차원 사회적 돌봄 일생활 통합/일가정 양립	(도시공간) 포용성 진단항목 [B]		공간 포용성 정책

3절. 성평등 도시계획 지표체계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간 포용성 지표 재구성

■ 유형별 공간포용성 (복합)지표를 활용한 성평등 도시계획의 지표체계

□ 기존 공간포용성 (복합)지표의 활용 방법

- 생활권 차원 도시기반시설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기준으로 제시된 3가지 공간유형별 [친환경 생태공간(공원/녹지), 이동편의(가로/도로), 공공시설(주택/공공시설)]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 기존의 복합지표를 활용

- 단, 기존 복합지표는 3가지 공간유형(생태공간(E), 이동편의(T), 공공시설(P))에 대한 포용성 평가항목(4가지)을 장소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으로 구분한 후, 인프라/서비스 접근성을 가중치로 설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복합지표를 공간포용성에 관한 현황분석을 위한 계획지표로 활용하는 것임. 이는 형평성 차원의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한 교차성 분석항목 도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포용성 강화에 기여

→ (활용) 사회적 다양성 확보 차원의 공간유형별 현황분석 기준

- 또한, 기존 복합지표의 인프라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가중치는 ‘평등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공간포용성 실태분석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임. 이는 성평등한 도시공간 또는 공공시설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활용) 평등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공간포용성 실태분석 기준

□ 성평등 도시계획의 공간유형별 계획지표 再구성

- 평가항목(3) : 교차성 분석항목과 공간포용성 진단항목을 결합한 형태로 젠더관점의 성평등 도시계획의 목표들로 제시

- (기존) 장소성/접근성/쾌적성/안전성 ▶ (개선) 다양성/접근성/안전성 차원의 평가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성평등 도시계획의 목표를 설정

[표 3-3] 대전시 공간포용성 지표 - 유형별 복합지표 / 재인용

자료: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p.86-87), 대전세종연구원

유형별 공간포용성 지표 *복합지표 : 정량지표 + 정성지표		가중치 (상대적중요도)		
		인프라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공간유형	공간포용성 세부지표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중요도)	
			인프라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생태공간 (E)	공원	장소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공간	입체적 도시 인프라 접근여부	사람중심 공간 서비스 제공여부
	녹지			
이동편의 (I)	가로	접근성 편리하게 연결되는 공간	가로 환경 (선)	주거 약자
	도로			
공공시설 (P)	주택	안전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	네트워크 환경 (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공공시설			

- 세부지표 : 기존의 공간포용성 (복합)지표를 활용하되, 성평등 도시계획의 지표로 재구성하기 위해 젠더관점의 전략으로 제시
 - (젠더) 다양성 전략 : 시민의 일상적 활동과 생활양식 반영
 - (젠더) 접근성 전략 : 사용자 관점의 공공시설·서비스의 연결
 - (젠더) 안전성 전략 :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개방적 장소감 형성

2. 성평등 도시실현을 위한 계획지표

■ [상위차원] 도시기본계획

성평등 가치(돌봄, 안전, 참여)와 핵심이슈를 반영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젠더 다양성·접근성·안전성 차원의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임

□ 성평등 핵심 이슈 설정 및 도시미래상 반영 ▶ 현황 및 실태 분석

- 교차성 분석 (성별 영향력과 공간수요) : 공간유형별 현황분석 기준
- 포용성 진단 (인프라/서비스 접근성 실태) : 공간포용성 실태분석 기준

교차성 분석	+	포용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영향력 (차이와 격차) • 성별 공간수요 조사분석 	+	① 인프라 접근성 실태 균등한 성평등 도시공간 선택과 배치/개발의 수정	② 서비스 접근성 실태 공동체 사회적 돌봄, 일생활 통합/일가정 양립

□ 비전·목표·전략 체계 ▶ 부문별 계획 수립

- (젠더) 다양성 계획
 - 모든 시민의 일상적 활동과 생활양식 반영
- (젠더) 접근성 계획
 - 사용자 관점의 공공시설·서비스의 연결
- (젠더) 안전성 계획
 -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개방적 장소감



■ [하위차원] 자치구별 생활권 계획

생활권 단위 공동체 차원에서 일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의 공공공간(시설) 조성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임

- 소통참여 서비스 ▷ 형평성 기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류 공간
- 균등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 ▷ 성별차이와 격차가 없는 창업 공간
- 보건안전 서비스 ▷ 성폭력/젠더폭력 예방 및 여성건강 증진 여가문화공간
- 이동편의 서비스 ▷ 성별 이동패턴과 이동약자를 배려한 가로/도로
- 돌봄양육 서비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양육(친화) 공간
- 주거지원 서비스 ▷ 한부모,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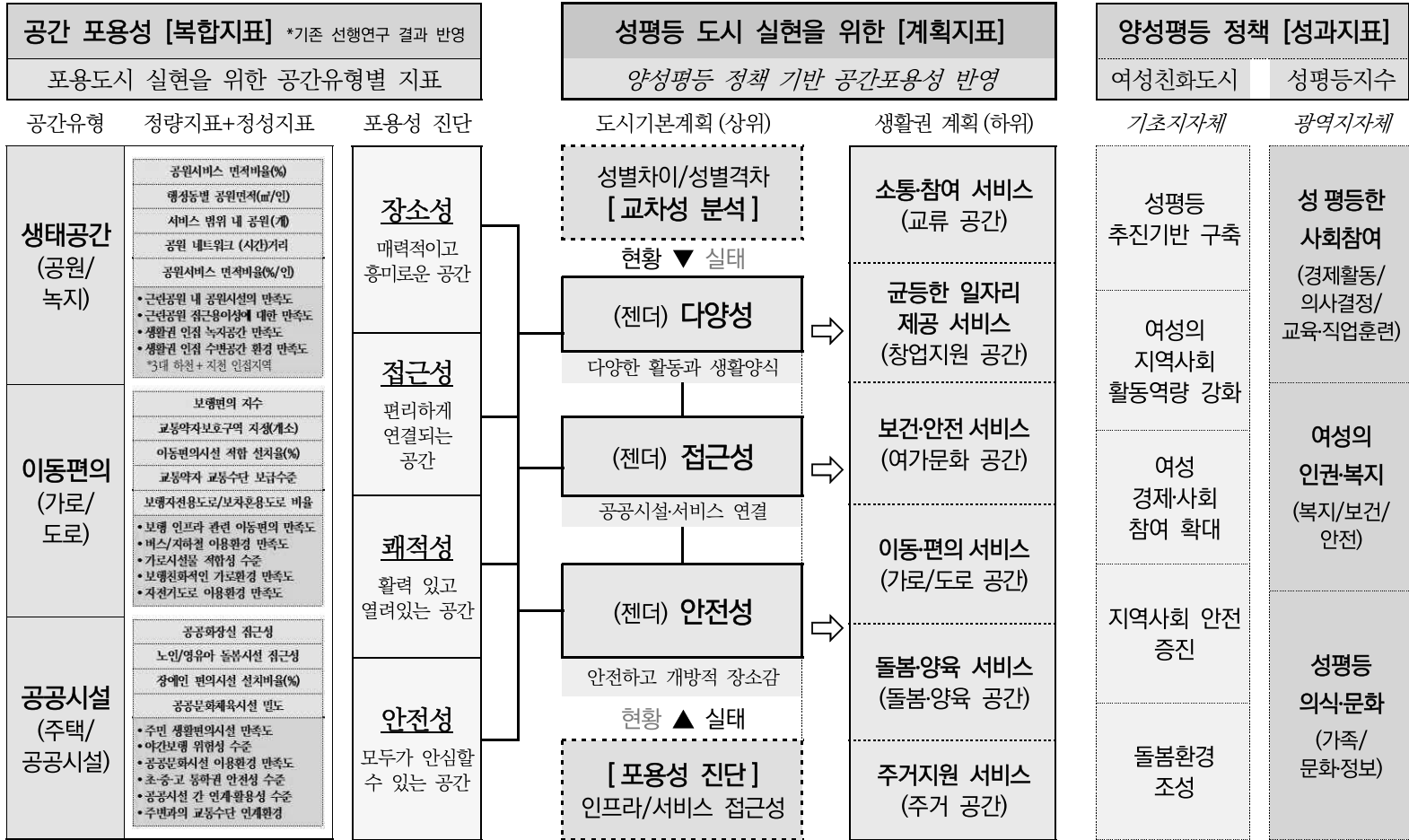
3. 양성평등 정책 중심의 성과지표(가중치)

앞서 언급한 계획지표를 반영하여 수립된 성평등 도시계획(상위차원/하위차원)의 성과지표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역 성평등지수와 기초지자체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결합하여 양성평등 정책이 잘 반영된 경우, 계획지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가중치로 활용하는 것임

■ 양성평등 정책지표 : 여성친화도시 성과지표(4) + 지역 성평등지수(3)

- [돌봄] 성평등 문화 기반 돌봄환경 조성
 - 공동체 돌봄인프라 확충, 여가시간 활용, 정보화 격차 등
- [안전] 성평등 기반 공동체 역량 강화와 안전 증진
 - 시민참여단,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안심구역 조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 [참여] 성평등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거버넌스 포용성 강화
 - 경제적 활동, 의사결정, 전담인력, 성평등예산, 대표성 등

[표 3-4] 분석의 틀 :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1절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정립

2절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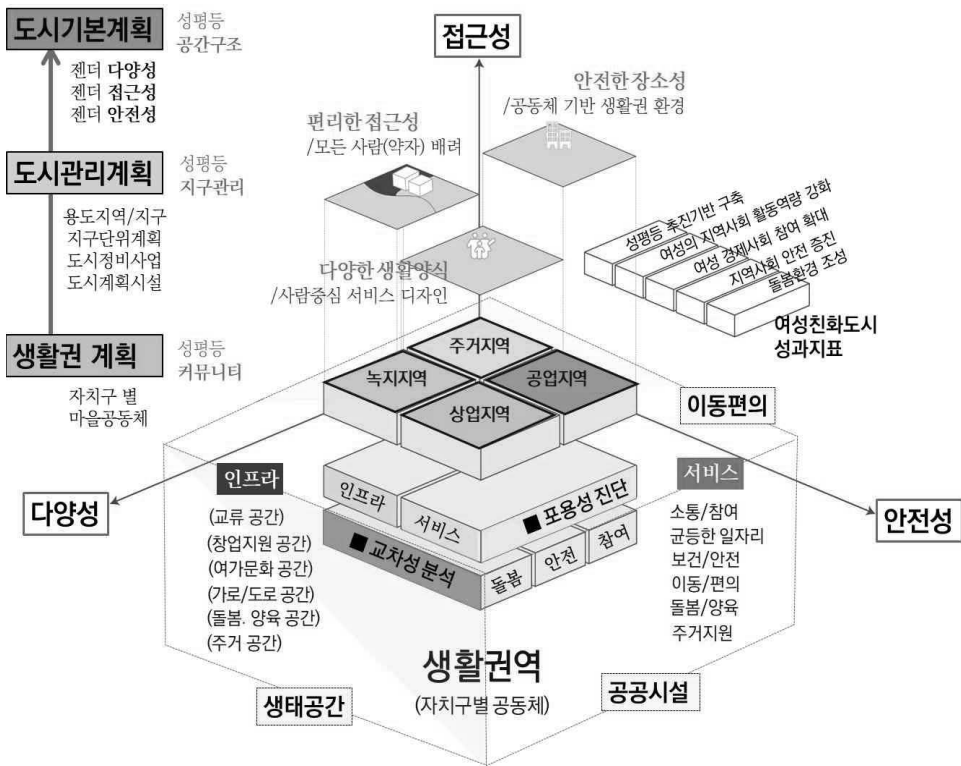
4장

4장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

1절.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정립

1. 기본구조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의 기본구조를 정립에 있어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준용하여 앞서 고찰한 내용을 반영하여 [그림 4-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4-1]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체계(안)

성평등 도시계획체계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정책과 포용도시 정책을 결합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적 다양성’ 실현과 공간포용성 차원의 ‘평등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념적 또는 가치 중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개념들과 가치들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핵심이슈(‘돌봄’, ‘안전’, ‘참여’)와 포용도시 정책의 핵심이슈(‘인프라 접근성’과 ‘서비스 접근성’)가 기존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젠더 관점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생활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과 포용도시 정책이 결합된 형태의 성평등 도시계획기법(지표)은 다음의 [표4-1]과 같이 구성된다.

[표 4-1] 포용적인 성평등 도시계획기법 도입을 위한 기본구조

구분	핵심어	핵심 이슈	성평등 도시계획기법(지표)						
양성평등 정책	사회적 다양성	[돌봄]	A. 다양성 모든 사람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공간 ▶ 다양한 생활양식 반영						
		[안전]	B. 접근성 모든 사람의 이동이 편리한 공간 ▶ 편리한 접근성 확보						
		[참여]	C. 안전성 모든 사람이 느끼는 안전한 장소 ▶ 안전한 장소성 창출						
정책 간 결합		이슈 대응	지표 간 결합						
포용도시 정책	평등한 접근성	[인프라]	교류 공간	창업 공간	여가문화 공간	가로 도로	돌봄양육 공간	주거 공간	
		[서비스]	소통 참여 서비스	균등한 일자리 서비스	보건 안전 서비스	이동 편의 서비스	돌봄 양육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요약하면, 성평등 도시계획은 도시공간에서의 양성평등과 포용적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적 요구사항과 주요 이슈에 대응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준용하여 일정한 대상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경우, 상·하위 차원의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기타 비법정 기본계획 등) 수립 시 핵심 정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계획지표 구성

□ (상위지표) 성평등 포용도시 3대 목표(다양성·접근성·안전성) 반영 기본계획 수립

성평등 도시계획은 양성평등 정책에서 강조하는 공통된 가치 즉, ‘돌봄’, ‘참여’, ‘안전’의 가치가 실제 도시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공간환경(공공인프라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모든 시민(사람)’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공간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A. 다양성: 모든 사람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공간 ▶ 다양한 생활양식 반영

○ 성별 격차나 차이, 일상생활의 패턴, 생활양식 등을 고려한 서비스(디자인) 기반 사용자 중심의 공간조성을 위한 목표를 반영한 지표

B. 접근성: 모든 사람의 이동이 편리한 공간 ▶ 편리한 접근성 확보

○ 생활권 안에서 돌봄·양육 서비스 연결, 대중교통수단 연결, 업무공간-생활공간 연결 등 모든 사람을 배려한 공간구성 관련 지표

C. 안전성: 모든 사람이 느끼는 안전한 장소 ▶ 안전한 장소성 창출

○ 생활권 차원의 장소성 자체를 공동체 차원의 방어적 공간(자기영역, 자연감시, 이미지와 주변 환경)으로 갖추는 것에 관한 지표

□ (하위지표) 생활권 공동체 서비스 중심의 공간계획 수립

성평등 도시계획은 ‘사람(거주민)과 공동체’를 계획에 중심에 두고, 공동체 차원의 거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접근한다. 기존 도시 계획체계가 토지이용과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성평등 도시계획은 거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즉, 도시공간의 기능을 먼저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거주민의 공간적 수요에 대응하여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하위차원의 도시계획에서는 시민이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과 생활 통합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과 그에 따른 생활 SOC 확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소통·참여 서비스

- 일상생활에서 형평성 기반 성평등 문화확산과 상호 존중 및 포용의 식 제고 차원의 지역공동체 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류공간 확보에 관한 지표

② 균등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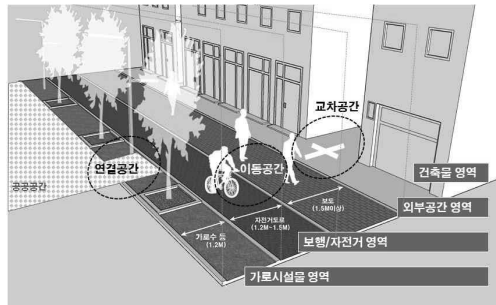
- 다양한 분야의 성별 차이와 격차가 없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적 역량강화, 경력단절 예방, 창업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창업 지원 공간 확보에 관한 지표

③ 보건·안전 서비스

- 성폭력, 젠더폭력 등의 예방, 성인지적 차원의 건강증진 기반 확보(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 일상 공간의 안전성(안전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 오픈스페이스, 여가문화 공간 등의 관리)에 관한 지표

④ 이동·편의 서비스

- 생활권별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활동여건 즉, 이용행태와 공간감을 비롯하여 성별 이동패턴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가로와 도로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지표



[그림 4-2] 사람중심 가로공간 가이드라인의 공간단위/영역단위 구분
 자료: 염인섭(2017)

⑤ 돌봄·양육 서비스

-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각종 돌봄지원 및 양육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양육(친화) 공간 확보에 관한 지표

⑥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 취약계층(한부모, 여성장애인 등)을 주거지원과 장소성과 주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출에 관한 지표

2) 성과지표 구성

성평등 도시계획의 성과지표는 양성평등 관련 정책지표 즉, 『여성친화도시(성과)지표』와 『지역 성평등지수』를 결합한 지표를 활용한다. 이는 포용적 성평등 도시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앞서 언급한 계획지표(상위/하위)에 의한 목표설정 과정을 비롯하여 생활권 차원의 공동체 서비스 기반 공간 조성 전략 및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기존의 양성평등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즉, 성과지표는 성평등 도시계획 지표별 영향력을 양성평등 정책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기본구조 : 성평등 관련 핵심이슈에 대응한 지표구성

국내 양성평등 정책 관련 성과지표는 여성친화도시 지표(5개 항목)와 지역 성평등지수(3개 항목)가 대표적이다. 단, 본 지표들은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비롯한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기법) 지표들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 도시계획’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공간계획 차원의 포용적 도시계획기법들이 양성평등 정책이 지향하는 계획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성평등 도시계획은 공간포용성을 갖추기 위해 성별 영향력과 공간수요를 면밀히 반영하는 형평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도시계획을 성평등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핵심이슈(참여/안전/돌봄)를

양성평등 정책 [성과지표]	
여성친화도시	성평등지수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보건/ 안전)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문화 정보)
지역사회 안전 증진	
돌봄환경 조성	

중심으로 포용도시 정책의 핵심이슈(인프라 접근성/서비스 접근성)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 개요 : 성과지표 작동구조

- 사회·문화적 측면의 양성평등 정책의 핵심이슈(Y)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공간포용성 세부지표(X) 영향력을 측정
- 성평등 도시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의 중요도 측정
 - ▶ 성평등 목표별 계층분석방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도입

○ 종속변수(Y) : 양성평등 포용도시 실현 [다양성/접근성/안전성]

- 3대 목표(A,B,C)별 성별영향력과 성별공간수요 ← 교차성 분석항목
 - ▶ (성별 영향력) 돌봄, 안전, 참여
 - ▶ (성별 공간수요) 다양한 생활양식, 편리한 접근성, 안전한 장소성

○ 독립변수(X) : 공간포용성 세부지표(계획기법) [인프라-서비스]

- 6대 생활권 인프라 및 서비스의 평등한 접근성 ← 포용성 진단항목
 - *공간유형: 생태공간(공원/녹지), 이동편의(가로/도로), 공공시설
 - 독립변수(X)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공간포용성 차원의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성평등 도시계획기법에 대한 성과지표로 치환하되, 생활권 단위로 성별 영향력과 공간수요를 고려한 종속변수(Y)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기법별로 가중치 설정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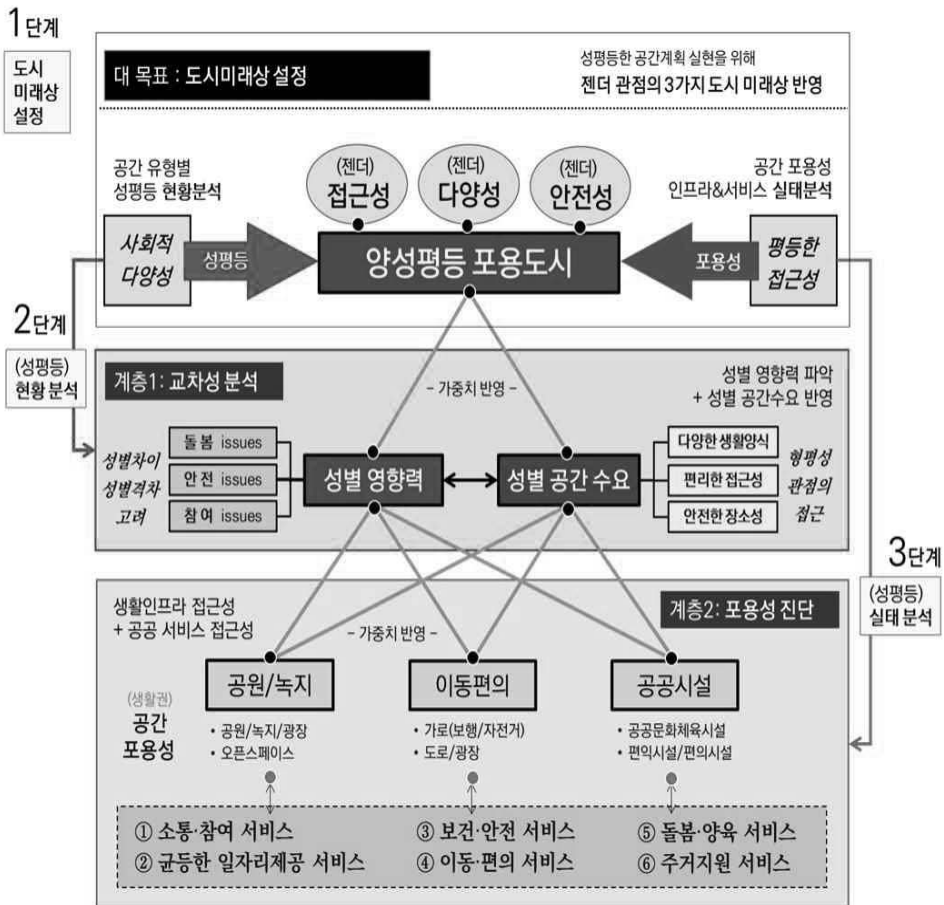
□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 수행

성과지표는 ‘양성평등 포용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 도시계획』에 대한 생활권 차원의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효과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
- 둘째, 모든 사람에 대한 성별 영향력과 공간수요를 반영할 것
- 셋째,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가중치 설정 : 양성평등 정책과 포용도시 정책의 계층구조 정립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해당 도시계획 대상지(생활권)의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1) 성평등 목표(도시미래상; 젠더관점의 접근성·다양성·안전성을 갖춘 양성평등 포용도시)에 대하여 성별 차이 및 격차를 고려한 형평성 관점의 2) 생활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계층분석방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도입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3] 성평등 도시계획의 단계별 계층구조(안)

□ **대목표 : 도시미래상 설정 [양성평등 포용도시]**

- 성평등 포용도시 3대 목표(다양성/접근성/안전성)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해당 생활권별 양성평등 포용도시 주된 목표 설정이 가능함
-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세분화된 목표설정도 가능함
- 예) ‘(젠더) 접근성’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 포용도시’ 실현

□ **계층구조 세분화**

대목표(도시미래상)를 실현하는 계층구조는 도시계획 대상지별로 교차성 분석항목(계층1)과 포용성 진단항목(계층2) 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계층 1 : 성평등 차원 교차성 분석 [성별영향력과 성별공간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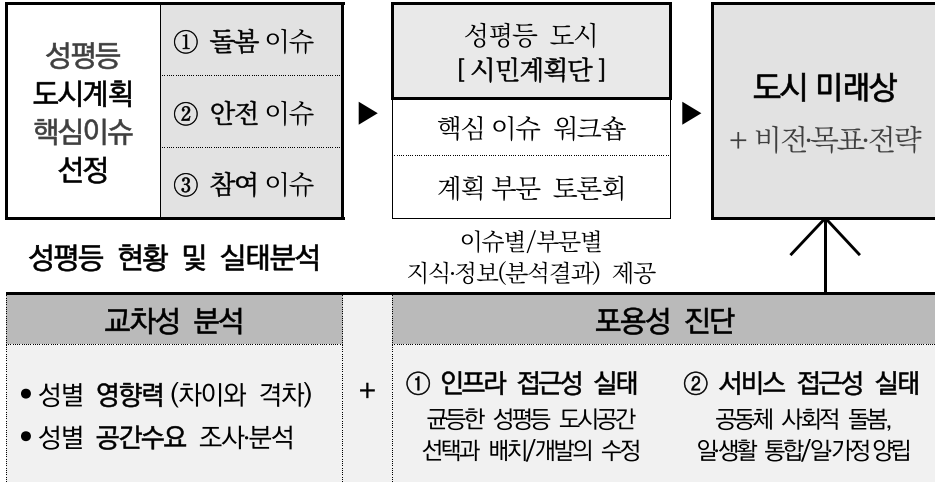
- 1-1. 성별 영향력 : 돌봄/안전/참여 이슈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성별차이와 성별격차를 고려한 계획내용(가중치)으로 구성 가능
- 1-2. 성별 공간수요 : 다양한 생활양식/편리한 접근성/안전한 장소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형평성 관점의 공간수요 파악 가능
- (시사점) 사회적 다양성 측면의 성별 영향력과 공간수요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성평등 가중치』로서 해당 대상지별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적 접근을 유도함

② **계층 2 : 공간유형별 포용성 진단 [공원/녹지, 이동편의, 공공시설]**

- 2-1. 공원/녹지 : 6대 생활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도시 내 주요 오픈스페이스 계획에 대한 주안점 제안
- 2-2. 이동편의 : 6대 생활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도시 내 주요 연결공간 계획에 대한 주안점 제안
- 2-3. 공공시설 : 6대 생활권 인프라 및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도시 내 주요 공공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주안점 제안
- (시사점) 평등한 접근성 측면의 생활권 공동체를 위한 6대 인프라/서비스 제공실태를 중심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선필요도(가중치)』 산정에 유용함

2. 단계별 계획수립 내용

[표 4-2] 성평등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 연계 구조



1) 도시미래상 설정

□ 성평등 도시계획 이슈와 공간수요 반영

교차성 분석은 본격적인 도시공간을 계획하기 이전에 사람을 중심으로 성별 차이나 격차로 인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포용성 진단은 도시공간을 사용자 관점에서 성평등 이슈(돌봄, 안전, 참여)에 대응하여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형평성을 갖춘 공공공간의 유형(생태공간/이동편의/공공시설)별로 인프라와 서비스의 접근성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 결과는 ‘(가칭)성평등도시 시민계획단’²⁸⁾에 이슈별·부문별 지식 또는 정보로 제공되고, 계획단에서는 워크숍과 토론회 과정을 거쳐 도시공간 속 성평등 가치실현과 형평성 관점을 반영한 도시미래상과 비전·목표·전략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구조이다.

28) 일종의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형태로 성평등 도시 관련 계획단으로 구성
 *참고사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0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2021~)

2) 교차성²⁹⁾ 분석 [성평등 현황분석] _성별 영향력 + 성별 공간수요

본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공간 속에 성평등 관점 또는 형평성 관점, 다양성·포용성 관점 등에 대한 반영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 **성별 영향력 : 사회적 차별과 특권에 관한 현황분석, 『성별차이 + 성별격차』** 이는 앞서 양성평등 정책차원의 성평등 도시공간 실현을 위해 강조되는 공통된 3가지 핵심이슈 즉, ‘돌봄’, ‘참여’, ‘안전’에 대하여 도시공간 사용자 입장에서 성별 차이나 성별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돌봄 이슈) 시민의 일상과 돌봄을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 돌봄(Care)의 가치를 인식하고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 설정 유/무
 - 연령·계층·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교류, 여가문화,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Care)을 고려하여 조성 유/무



[그림 4-4] 지역사회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예시)

자료: 대전시 대덕구(2016).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프로젝트

29) 교차성은 성, 연령, 장애, 소득, 인종, 민족 등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이 상호 교차하여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일컫는 개념

- ② (안전 이슈)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 일상생활 속 공공공간/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 유/무
- 모든 공동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도시계획시설 활용 전략 유/무



[그림 4-5]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활동 (리빙랩) 예시
 자료: 충남연구원(2017)

- ③ (참여 이슈) 여성의 적극적인 도시계획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 모든 시민이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개방적인 계획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수립 유/무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여성참여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여성 참여형 젠더 거버넌스'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현재는

- ✓ 완료된 사업을 검증하는 수준
- ✓ 다른 기관의 정책 모니터링과 중복
- ✓ 중장기적 계획 및 추진의 필요성 인식
- ✓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 선정 필요
- ✓ 지역특색 반영 및 생활밀착형 사업발굴 및 선정
- ✓ 모니터링 역량 강화 과정 확대 및 다양화

자료 출처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7)

여성 참여 활성화 제안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모니터링

- 도시재생사업 현장센터 실무자, 활동가 대상 성인지 관점 교육 필요
-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 현장센터 공간 - 단순 실무공간을 넘어선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
- 도시재생대학 과정에 성인지 관점 교육-여성주민의 임파워먼트
-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주민참여를 UP!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이 참여 기회 확대 - 회의시간, 아이 동반 등 고려

주민들의 참여가 봉사라 아닌 정당한 수당 등 적절한 보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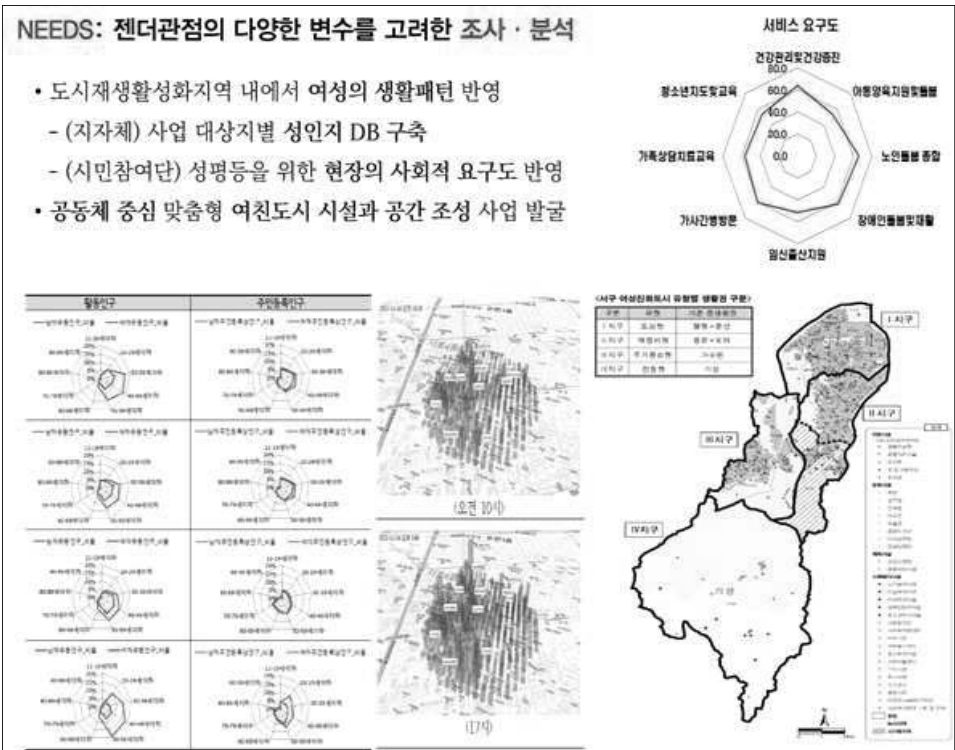
[그림 4-6]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사례 (예시)
 자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광역시

□ **성별 공간수요 : 형평성 있는 도시공간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성별로 나타나는 공간수요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이 도시 공간 속에서 생활하면서 인지하는 또는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공간 속에 성 평등 관점 또는 형평성 관점, 다양성·포용성 관점 등에 대한 반영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공간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다양한 계층과 생활양식을 반영한 성별 공간수요 파악분석

- 도시 공간 속에서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제거하고
즐이기 위해 성별 차이와 격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별 분리통계, 상호 교차성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



[그림 4-7] 젠더관점을 반영한 성별 공간수요 분석 (예시)

*일정한 공간(구역/지역)의 성별 활동인구와 생활양식, 이동패턴 등에 기초한 서비스 요구도 파악
자료: 김종학 외 4인(2014), 대전광역시 서구청

- ① 다양한 생활양식 : 사람 중심 서비스 디자인 ex) 사람포용성(경제적/사회적 역량)
- 모든 사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공간과 공공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사항 반영
 - 성별·세대별·생애주기별(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이용 패턴

② 편리한 접근성 : 모든 사람(약자)을 배려한 디자인

-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 및 시설인프라를 기반으로 공동체 기반 다양한 서비스 연계 구조와 요구사항 반영



[그림 4-8] 요일별 이동패턴(예시)
 자료: 김종학 외 4명(2014)
 *활동중심점 변화과정을 응용하여 생활권 내 성별 이동패턴 분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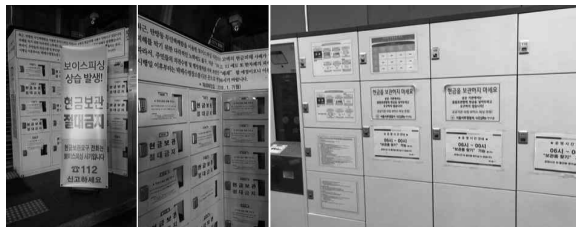
- 공간유형(생태공간/이동편의/공공시설)별 도시계획시설의 성별 수요 반영 및 분석

면단위 가로공간의 시간대별 주중, 주말 활동중심점 변화 예측(예시)

- ③ 안전한 장소성 : 공동체 기반 생활권 환경 디자인 ex)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생활권 내 일상생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간관리와 포용적인 공공공간(가로, 도로, 블록, 오픈 스페이스 등)에 대한 성별 수요 분석
 - 생활권 차원의 공간유형(생태공간/이동편의/공공시설)별 안전성



대구 고속도로 통로BOX 주변 범죄예방 벽화 설치(성공사례)
 자료: 이형복(2022)



대전 서구 무인택배함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지역 :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실패사례)
 자료: 이형복(2022)

3) 포용성 진단 [성평등 실태분석] _사용자³⁰⁾ 관점 인프라/서비스 접근성

□ 포용성 진단 : 형평성 관점 반영 ▶ 포용적 공간환경 조성의 방향성 정립

형평성 기반 도시계획지침과 공간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 친환경 생태공간의 포용성 수준 [예: 공원, 녹지, 주거지(블록) 등]
- 편리한 이동편의 인프라의 포용성 수준 [예: 가로, 도로, 광장 등]
- 다양한 공공시설의 포용성 수준 [예: 공공문화체육시설, 편의/편익시설 등]

① 인프라 접근성 : 균등한 성평등 도시공간의 선택과 배치/개발의 수정

○ 성평등 관련 공간(교류/창업지원/여가문화/가로/도로/돌봄/양육/주거)에 대한 근접성과 접근성, 이동성, 연결성 등에 관한 지표로 구성

- 도시 내 주요 공공공간(시설) 관련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지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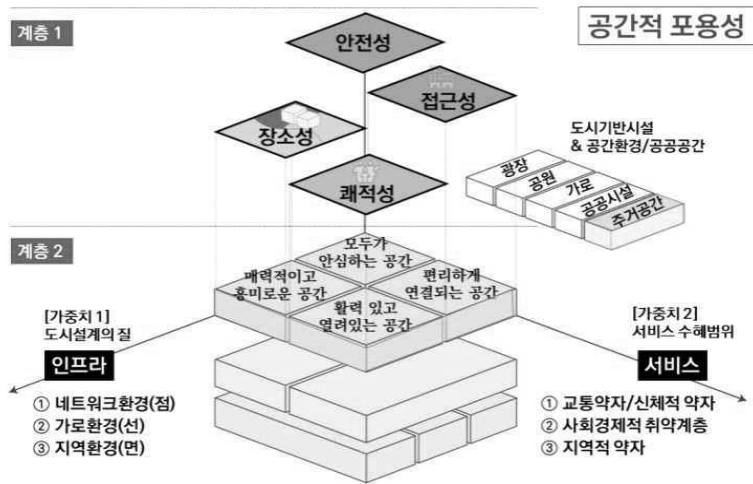


[그림 4-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예시)

자료: 이형복(202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발표자료

30)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특정계층 인구(신체적 약자, 기능적 약자, 지역적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등의 그룹)를 모두 포함

- ② 서비스 접근성 : 공동체 차원 사회적 돌봄, 일·생활 통합/일·가정 양립
- 성평등 관련 서비스(소통참여/균등한 일자리/보건안전/돌봄양육/주거지원)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연계·활용성 등에 관한 지표로 구성
 - 교통약자, 주거약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개별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지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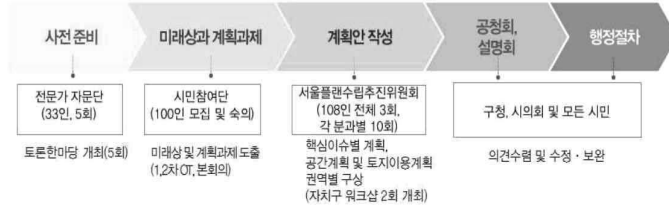


[그림 4-10] 생활권 단위 공간포용성 강화를 위한 지표체계
 자료: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참고자료 1.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2014)』

- 1단계 : 시민참여형 계획수립 체계(2012.8.~)
 - 총괄 계획단(MP) 구축 ; 추후, 분과별 계획단(MP) 구성
 - ▶ 전문가 포럼, 전문가 자문, 이슈별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
 - 시민참여단 모집·운영(19세 이상 일반시민 100명+청소년 16명)
 - ▶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개최
 -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 시민도시” ▶ 제안·채택
- 2단계 : 핵심 이슈별 계획수립
 - 시민이 제안한 미래상과 계획과제 구체화
 - ▶ 핵심이슈별 계획 6개 분과(5개 분과+총괄조정분과)로 구성

-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상의 목차가 아닌 서울의 특성에 맞게 주제를 구성
→ 이슈별 『목표-현황과 과제-기본방향-주요지표』 구성 후, 전략 수립



2030 서울플랜의 시민참여형 계획수립 과정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의 도시미래상 설정과정

- 시민참여단 제안 7대 계획과제를 총괄조정분과의 조율을 거쳐 5개 분과 구성



□ 3단계 : 생활권 단위의 계획수립

- 생활공간에 기초한 전략계획 : 권역별·자치구별 생활권 단위 계획
- 권역별/지역별(자치구) 발전방향 설정
- 분야별 계획과제 : 5대 분야(중심자일자리/주거지 관리 및 개선/교통체계 개선/생활기반/지역특화) *시민의견을 반영한 분야로 선정

2절.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 운영

1. 생활권 차원 성평등 커뮤니티 보드 구성

1) 기본개념 : 성평등 커뮤니티 보드_ ‘(가칭) 성평등도시 시민계획단’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비전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을 중심으로 계획단(주민위원회, 주민협의회, 주민자문단 등의 형태)을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한 사례는 많지만, 일회성이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 계획수립을 완료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중에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와 세종시 정도인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는 자체 운영조례도 있지만, 도시계획 조례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지방분권 차원에서 마을단위(읍·면·동) 주민자치회 형태로 거주민 중심의 마을관리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2030 서울플랜(2014)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2012년~2014년)
-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2015) : 시민참여단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2018) : 시민참여단 (2015년 6월~12월)
-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2014.2)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2012~현재)
-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2021) : 마을계획단 (2021~현재)

한편, 시민계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포용도시 정책에서는 일종의 ‘거버넌스 포용성(시민참여 + 투명성과 책임)’ 이라고 정의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시민참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운영기구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보드’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³¹⁾에서 공동체 또는 생활권 차원의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위한 대표기구 성격을 반영하여

31) 이다예 외 3인(2021),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국토연구원

편의상 ‘커뮤니티 보드’³²⁾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표 4-3]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자료: 이다예 외 3인(2021)

구분		세부 내용
공간 단위 (선택)	①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이 잘 갖춰져 있거나 참여가 활성화된 경우 • 도시계획·개발 안건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 * 상위 공간 단위 연합체를 구성하여 위계 구조 형성 가능
	② 자치구 및 생활권 (읍·면·동 다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읍·면·동에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할 수 없거나, 자치구 또는 생활권 수준의 도시계획 논의가 필요한 경우 * 상위 공간 단위 연합체를 구성하여 위계 구조 형성 가능
	③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또는 생활권 수준에서 충분한 규모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도시계획·개발 안건이 적은 중소도시에 적합
도입 방법 (선택)	① 조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 주민조직이 없는 경우 • 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준 정립, 기존 조직과의 기능 조율 필요
	② 기존 조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대표성 있고 고착화되지 않은) 주민조직이 있는 경우 • 커뮤니티 보드 특성에 맞춰 기존 조직의 구성과 기능 보완 필요
규모와 구성	조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보드의 적정 규모는 20~50명 정도 - 그 외 일반 주민들이 안건 논의 시 참여 가능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연령·직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확보하고 2년마다 교체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진과 분과위원회 구성 권장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시계획수립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 마을계획 또는 생활권계획 수립 주체로 역할 ② 주요 안건 협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주민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인지 판별 ③ 정보제공·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도시계획 정보공유 •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관계 기관에 전달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과 업무량에 맞는 관계 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여 주민들의 참여 보장 •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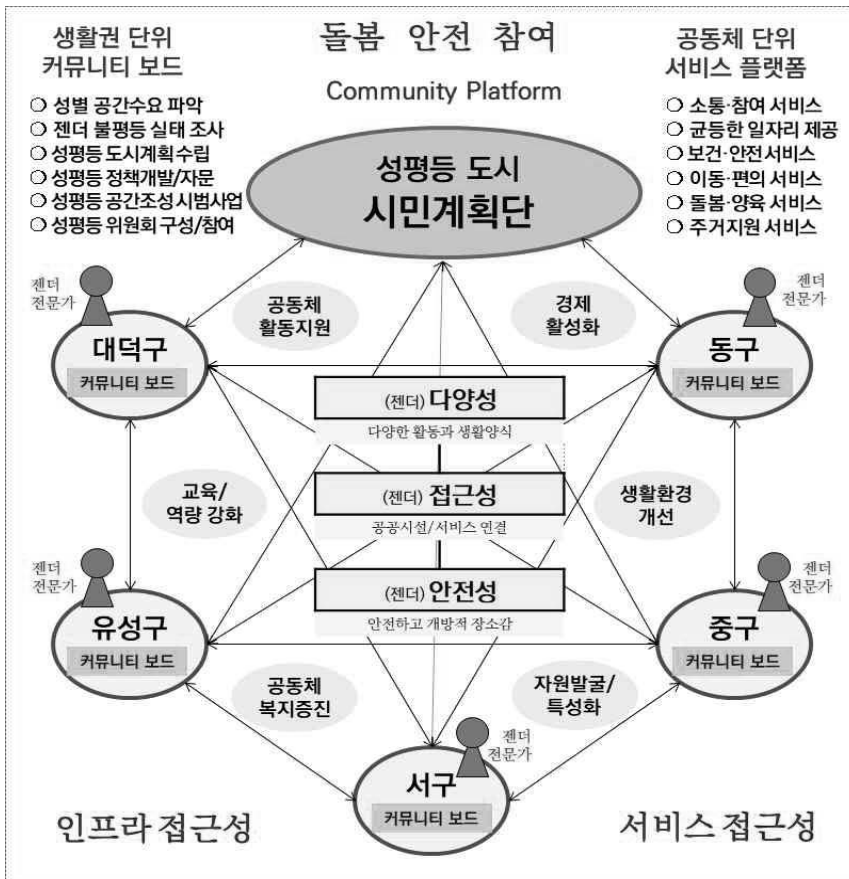
성평등 도시계획의 커뮤니티 보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이나 역량에 맞춰 공간규모와 도입방법, 조직의 규모와 구성, 주요 기능, 운영방식 등을 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이다예 외 3인) 결과를 주목하면, 대전시는 자치구 및 생활권 단위로 기존 조직(마을공동체, 주민자치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활용하되, 시민참여 규모는 자치구별 100명 이내로 전체 500명 이내(전문가

32) ‘특정한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거나 각종 도시계획·개발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 기구이자 상설 기구’

제외)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의 수립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본구조 :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보드 구성과 주요 기능

- ① 형평성 기반 성평등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구성 : 거버넌스 포용성 강화
- ② 젠더전문가 참여 기반 커뮤니티 보드 구성 : 자치구별 성평등 공간수요 반영
- ③ 성평등 도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을 위한 성평
등 핵심 이슈별 빅데이터 활용체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그림 4-11] 대전시 성평등 도시 시민계획단(커뮤니티 보드) 기본구조

참고자료 2.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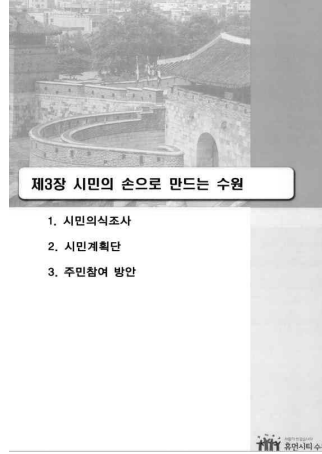
- 2012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으로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2014.2)』을 수립하는 과정에 약 240명(성인 130명/청소년 100명)이 참여함

- 성인 : 도시계획의 비전·목표, 기본방향과 전략, 세부 실천전략, 지표설정(우선순위 선정) 등
- 청소년 : 학교 내·외, 마을, 도시 등에 관한 의견수렴, 청소년 수준의 실천지표 설정 등

- 2014년에 도시계획 조례에 시민계획단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이외에 도시정책 의사결정기구 기능을 부여하였음

- 2019년에 『수원시 시민계획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

- 시민계획단은 500명 이내의 규모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민들은 2년 임기 무보수 명예직으로 참여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제3장 간지



□ 조직구성

- 시민계획단 구성 : 직접 공모나 시민단체 추천 등을 통해 선정
 - 청소년 계획단은 수원시 소재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미래의 시민으로서 정책 토론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수원시, 2015)
- 참여규모 : 2021년 9월 기준, 총 400명(성인 300명, 청소년 100명)
- 운영위원회 구성 : 시민계획단 선발과 운영 지원, 토론 안건 검토, 토론회 주관,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



수원시 시민계획단 구성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인/청소년(명)	-	-	130/100	130/100	300/100	300/3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성인/청소년(명)	250/250	250/250	250/250	300/200	300/200	300/100



수원시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조직도



원탁토론회 개최 실적(2014~2019)

날짜	활동 내용
2014.08	수원역 롯데를 개점 관련 원탁토론회
2014.10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원탁토론회
2015.10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노면전차 활성화 등과 관련된 원탁토론회
2016.09	영흥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탁토론회
2017.11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관련 원탁토론회
2018.11	수원형 스마트시티 및 서수원 발전방향 관련 원탁토론회
2019.1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방향 관련 원탁토론회
202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활동 중단

□ 주요 기능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 도시미래상 논의, 정책발굴 및 제안 등
- 도시계획·정책의견 제시 : 이슈별로 비정기적인 원탁토론회 개최
 - 해당 안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2014년~2019년까지 총 7회 개최
 - * 2014년에는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시민들과 안건 결정을 진행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수원시, 2016)

□ 시사점

-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는 시민계획단 의견 중 92.6%가 반영되었고, 도시관리계획에도 49건이 반영
 - 다양한 분야별 안건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결정
 - 시민계획 시민계획단 내 자체 논의를 통해 도시정책의 공론화와 의견수렴이라는 역할과 운영 방식을 정립하고 자율적으로 안건을 제시
- 다만, 20~30대 청년의 참여가 저조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황임. 향후, 온라인 참여시스템과 매뉴얼 구축 예정임

참고자료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2021~)

□ 추진 경위

-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임
- 세종시는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임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나아가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 사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협의 사무, 시장 및 읍·면·동장 위탁 사무 등을 수행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 상	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구 성	10명~50명 이내	30명 이내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사무)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등 • (협의 및 자문사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예산협의회 관련 사무, 읍·면·동의 일부 행정사무 등 협의 및 자문 • (수탁사무) 노인대학 운영, 자전거 순찰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사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
위촉권자	시장	읍·면·동장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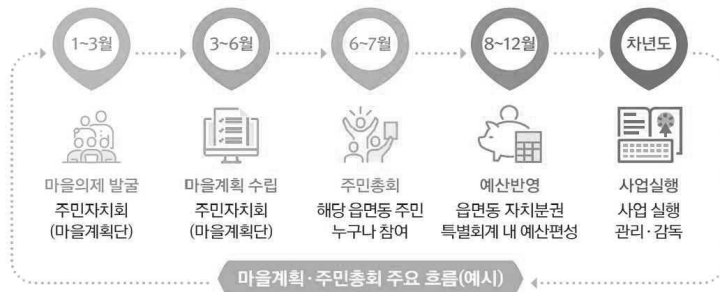
-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행정구역에 주민자치회를 도입·운영함
 - 세종시 20개 읍·면·동
- 해당 지역 주민 10~50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의해 위촉되어 2년 임기 동안 봉사직으로 업무를 수행
 - 연령별·성별·지역별 선정 비율을 사전에 결정 /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



□ 주요 기능

○ 세종시 주민자치회는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협의·실행 역할을 수행

- ① **마을계획 수립** : 주민들이 직접 마을 현안을 발굴하고 마을 발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실행/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30명 이내의 마을계획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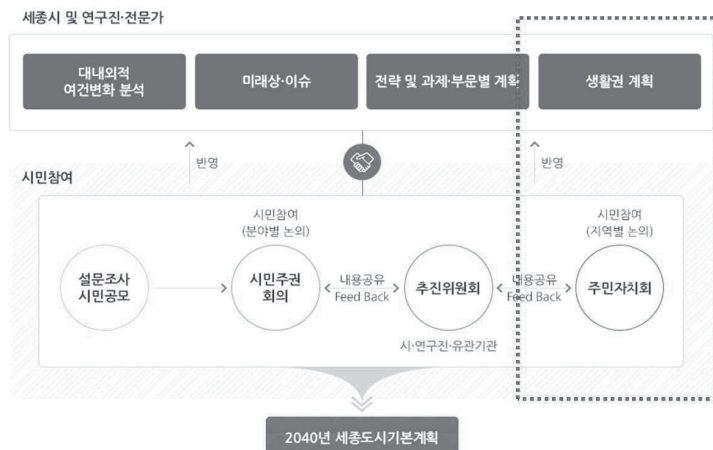


- ② **주민총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

- ③ **예산협의** :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예산협의회 기능
[마을계획사업, 주민제안사업 검토→우선순위 결정→주민총회→최종 예산 편성·제출]

- ④ **도시계획 참여·자문** :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단으로 참여,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자문단으로 참여

- 2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총 70여 명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2021년 9~10월 간 총 5회의 참여단 모임 개최)하여 생활권계획(안) 작성



2. 주민체감형 성평등 도시 인프라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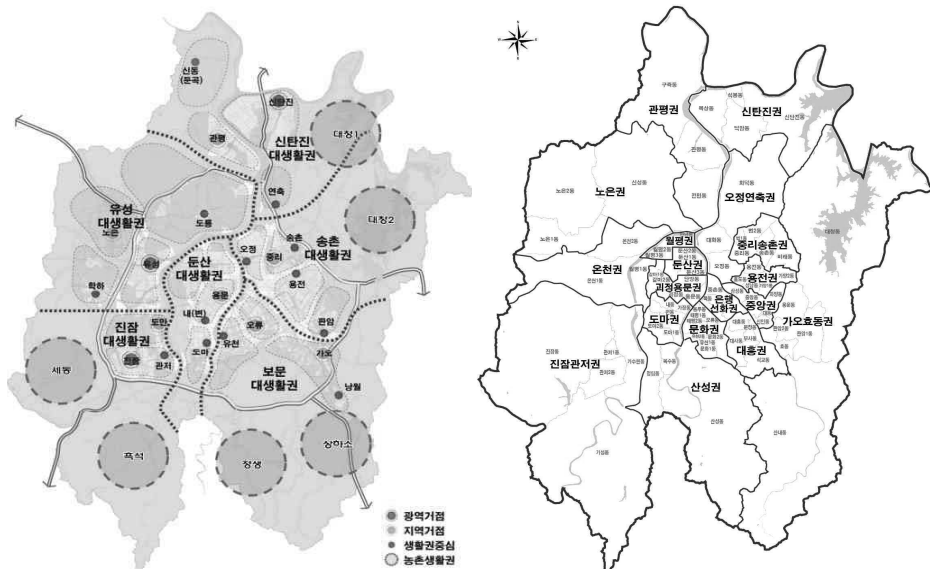
1) 생활권 공간위계를 고려한 인프라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현행 도시계획체계 상 생활권은 양적기준(인구규모, 면적, 잠재력 등)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적기준 즉, 생활권 거주민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 성평등 도시계획 차원의 생활권 설정

○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2013년 수립; 2019년 일부변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권 설정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생활권 계층 : 초등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소생활권, 중고등학교와 지구중심 상업 중심을 중심으로 한 중생활권, 부도심 및 도심상업을 중심으로 대생활권, 시가지지역 외 농촌생활권으로 구분
- 설정기준 : 인구규모와 면적, 도시공간적 위치, 잠재력 등



[그림 4-12] 대전광역시 생활권 구상도 (左:대생활권/右:중생활권)

자료: 대전광역시(2013,2019)

○ 성평등 도시계획에서의 생활권은 단순히 인구밀도나 인구배분 중심의 규모에 기초한 계획보다는 젠더관점의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나 남녀 간 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이동패턴과 생활양식, 생활환경을 둘러싼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평등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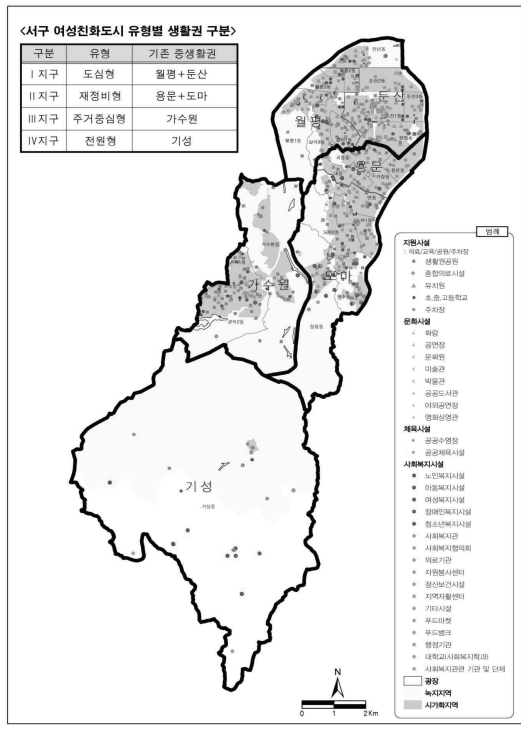
- 도시기본계획에서 구분된 생활권이 공동체가 실제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성에 기초한 생활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대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2013) 유형별 생활권 설정 과정을 살펴보면, 자치구 권역 내에서 성별 차이가 없이 균등한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별 인문사회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유형별 생활권을 제시하고 있음. 그 설정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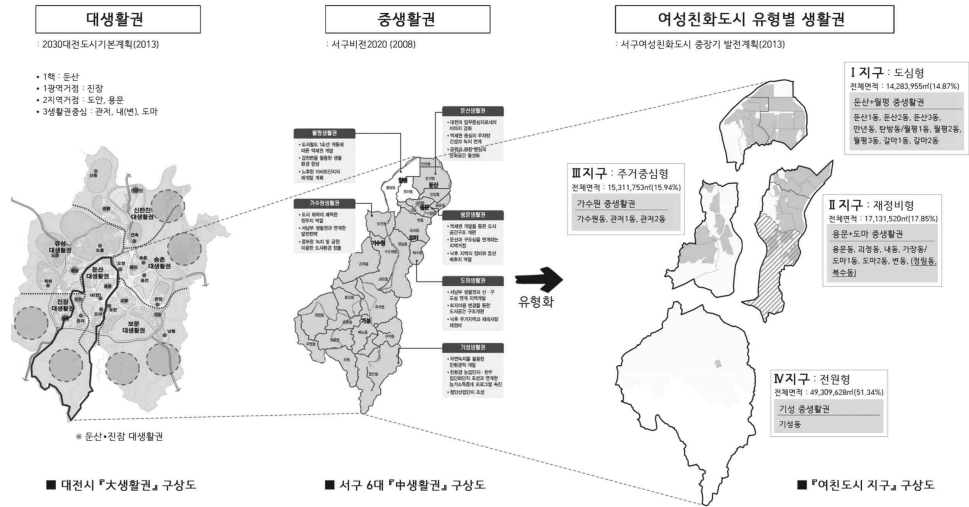
- 첫째, 권역별 공간구조와 주변 공공시설(생활S.O.C)과의 연결성(접근성)을 고려해야 함

- 둘째, 해당 권역별 주민의 생활양식과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차원의 거주특성을 고려해야 함

- 셋째,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종합하여 공동체 기반 질적 생활환경을 반영해야 함



[그림 4-13] 여성친화도시 유형별 생활권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청(2013)



[그림 4-14] 대전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유형별 생활권역 구분
 자료: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3)

생활권 설정 기준	생활권 유형
1. 공간구조 및 연결성 고려 (지속가능성, 능동성, 자유로운 이동, 네트워크 등)	도심형/ 부도심형/ 생활권 중심형
2. 주민의 생활양식 및 행동특성 반영 (성별차이, 안전보장, 기회평등, 참여보장, 실천성 등)	도시생활형/ 농촌생활형/ 주거 중심형
3. 주거권 및 주거환경 고려 (주거권, 안전보장, 지속가능성, 실천성, 네트워크 등)	신도심형/ 구도심형(재정비형)

□ 생활권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앞서 언급된 공간포용성 (복합)지표들을 활용하되, 생활권 차원에서는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관련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수준에 대한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활권 단위 계획에서는 성평등 도시계획의 3대 목표(다양성, 접근성, 안전성)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국, 다양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 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모니터링

- 생활권 거주민이 체감하는 편익증진시설(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시설, 공원 등)에 대하여 양적 규모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질적 수준(만족도 등)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 매우 중요
[기준] 균등한 성평등 도시공간의 선택과 배치/개발의 반영 여부

○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모니터링

- 성평등 도시계획의 6대 서비스와 연계한 생활권 단위 기능 공간에 대한 현황 및 실태(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 분석을 통해 인지된 성평등 관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 중요
[기준] 공동체 차원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일·생활 통합/일·가정 양립 서비스 등에 관한 제공 여부

2) 생활권 기반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자치구별 커뮤니티 보드는 대생활권/중생활권/소생활권 단위 성평등 공간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해당 권역별 거주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사용자 주도형 사회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개념 : 사용자 주도형 전문화된 커뮤니티 플랫폼

-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에 해당하는 일종의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공동체 플랫폼 개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전문화된 커뮤니티’³³⁾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 연계 여성친화도시 전문 컨설턴트(중앙-공간분야/지자체 전담-여성친화도시 지정)와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활동가 그룹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형 성평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33) 성지은 외 2인(2016):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실 공간과 결합되어 리빙랩 활동의 잠재력을 강화하게 됨

□ 기본구조

앞서 언급한 광역차원의 커뮤니티 보드 중 ‘성평등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보드는 공동체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가칭) 성평등 도시데이터 플랫폼은 성평등 핵심 이슈별 빅데이터 활용체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권 또는 공동체 단위의 성평등 공간수요에 대응하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①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보드

○ 성평등 도시계획 관련 6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동체 단위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생활권 단위 기능별 공간수요를 반영

○ 주요 기능

- 서비스 기반의 성별 공간수요 파악과 젠더 불평등 실태조사
 - 교차성 분석 및 공간포용성 진단 과정과 연계
- 생활권 단위 성평등 도시계획 수립, 정책개발, 자문 등 제공
- 생활권 단위 성평등 위원회 구성 및 참여
 - 성평등 도시계획위원회(분과)와 적극 연계
- 생활권 단위 성평등 공간조성 시범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



② 성평등 도시 데이터 플랫폼

- 젠더 다양성/접근성/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 성평등 공간 수요를 바탕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데이터 맵(Map)을 작성하고, 데이터 시각화 작업과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
- 주요 기능

- 생활권 단위로 성별 교차성 분석과 포용성 진단 관련 데이터 수집
- 성평등 핵심 이슈별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조사/수집 ▷ 분석/가공 ▷ 확장/적용)
- 생활권 단위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성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림 4-15] 성평등 도시관련 빅데이터 활용체계(예시)

자료: 염인섭(2022), 대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일부 그림 재인용

- 소통참여 서비스 ↔ 교류공간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 균등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 ↔ 창업 공간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 보건안전 서비스 ↔ 여가문화 공간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 이동편의 서비스 ↔ 가로/도로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 돌봄양육 서비스 ↔ 돌봄양육(친화) 공간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 공간 빅데이터 활용 및 모니터링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수진(2019),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국토연구원.
- 김양희(2008),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Internationa Symposium on New Global Issues on Gender Mainstreaming Implication For Women's Policy in Korea' 발표 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학 외 4명(2014),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 문기현(2021), 〈젠더이슈 2021년 제17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태원(?), 〈여성친화 도시조성을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손문금(2013), 〈성평등 도시공간과 살기 좋은 마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성지은 외 2인(2016), 〈국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184).
- 염인섭(2017), 〈대전시 사람중심 가로공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 세종연구원.
- 염인섭(2019), 〈세종-대전 마을공동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염인섭(2020), 〈대전시 포용도시 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염인섭(2022), 〈대전 2040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이다예 외 3인(2021),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국토연구원.
- 이형복(202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발표자료〉, 대전광역시.
- 조선주 외(2017), 〈여성친화도시 시행단계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병두(2017), 〈관계적 공간과 포용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6호, 대한지리학회(2017-12)
- 최유진(2021),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 교육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전광역시 서구청(2013),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 대전광역시(2013),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대전광역시(2019), 〈2030년 대전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
- 부천시의회(2012), 국외연수결과보고서-‘유럽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 익산시(2009), 여성친화 창조문화도시 발표자료

여성가족부(2022), 성별영향평가지침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2021), 국가성평등보고서

〈국외문헌〉

Cameron, A.(2005),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initial repor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p.194-203

Ravetz, J. with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1999), “City-Region 2020: Integrated Planning for Long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Earthscan, London

Ravetz, J.(2000), “Urban Form and the Sustainability of Urban Systems: Theory and Practice in a Northern Conurbation”, E & FN Spon, 215~228.

McCann, E. and Ward, L.(2010), “Relationality/territoriality: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cities in the world”, *Geoforum*, 41, 175~184.

UN Women, *From Insight to Action* (2020)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352-3 93350